



주간통일정세 2010-36(2010.08.30~09.0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3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8월25일을 ‘선군절’로 제정(9/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 영도’를 시작했다는 8월 25일을 ‘선군절’로 제정
 - 방송은 북한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24일 시·군 당위원회에서 장군님(김정일)이 선군영도를 개시한 8월 25일을 ‘선군절’로 제정할 데 대한 중앙의 결정을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매년 이날 기념행사가 진행된다”고 말함.
 - 소식통은 “아직 ‘선군절’이 대외에 공표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만 기념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임.
 - 또 량강도 혜산시의 기계공장에 다닌다는 주민도 ‘선군절’ 제정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지난 8월 25일 오전에는 직장에 나가 일하고, 오후에 집체적으로 강연회와 학습회를 했다”면서 “당시 강연회에서 ‘장군님의 선군사상을 충실하게 받드는 김정은 대장에 의해 우리 혁명의 대가 곳곳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방송에 전함.

- **당대표자회 앞둔 北, 사실상 ‘계엄상태’(9/2, 자유아시아방송(RFA))**
 - 44년 만의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북한 곳곳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낙서’ 행위가 늘어나고 일부 전단 살포 사건까지 발생, 당국이 비상경계에 들어가는 등 사회 전체가 사실상 ‘계엄상태’에 빠짐.
 - 방송은 복수의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 “평안남도 평성과 황해북도 사리원 등 도시 지역의 아파트 벽과 공장 울타리에 국가정책을 비난하거나 당 간부를 비방하는 낙서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는 이번 당대표자회를 비방하는 전단이 평성과 함흥에 뿌려졌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밝힘.
 - 양강도 소식통은 이 방송에 “지난달 18일과 27일 반동적 낙서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가 내려져, 당 조직과 근로단체 조직별로 낙서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하라는 교양을 받았다”면서 “모든 간부들의 출장과 여행도 금지됐고, 주민들은 반드시 공민증을 갖고 다니되 야간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통제받고 있다”고 분위기를 소개
 - 또 평안북도 소식통은 “지난달 25일 모든 간부들과 사법기관에 비상경계태세 지시가 내려졌다”면서 “대낮에도 길거리에 40~50m 간격으로 보안원들이 배치돼 있다”고 말함.



- 이밖에 지난달 25~28일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던 ‘전시비상대 피훈련’이 이유없이 취소됐고, 지난달 25일부터 1주일간 평양시 인민보안부 사격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제47차 전국 청소년국방사격 경기대회’의 경우 개막일이 23일로 앞당겨지고 일정도 사흘로 단축됐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이어 노동당 대표자회라는 큰 행사가 목전에 다가오자, 북한 당국이 군대가 움직이는 군사훈련이나 주민 이동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평소 쌓였던 사회적 불만이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집단 분출되는 상황을 우려해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
 - 국내 탈북자단체 관계자는 “북한에서 당국에 대한 불만을 낙서나 뼈라로 분출하는 것은 평소에도 종종 있는 일”이라면서 “2002년도인가에는 2.16(김정일 생일) 행사 때 항흥 만세교 다리에 김정일을 비난하는 뼈라가 뿌려지고, 다리 ‘난간에서 ‘백성은 굶는데 김정일만 잘 산다’는 낙서가 발견돼 근처 주민들이 전원 필적 조사를 받은 일도 있었다”고 소개
 - 이 관계자는 또 “대기근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던 1999년에는 함경남도 허천군의 보위부장이 납치,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다”면서 “북한의 젊은층은 당간부 등 기득권 세력이 부패했다는 걸 다 알아 돈벌이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당국 때문에 피해를 보면 낙서나 뼈라로 복수를 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1일 이번 당대표자회 일정이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으로 잡혔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추대하는 의식이 예정돼 있다고 전함.
- **北 당대표자회 앞두고 ‘김정은 찬양’ 고조(9/3, 교도통신)**
- 통신은 평방발 보도를 통해 북한 평양에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김정은 찬양가요로 알려진 ‘발걸음’이 유독 많이 불리고 있다고 보도
 - 이어 평양역 주변에서 북한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김일성 장군의 노래’나 ‘김정일 장군의 노래’와 함께 ‘발걸음’을 부르며 행진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평양 시내에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고 쓴 간판이 설치됐다고 덧붙였다.



[김정일 訪中 관련]

1)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 확인 행로

- 8월 25일(수)
 - 김 위원장, 평양 출발
- 8월 26일(목)
 - 0시, 특별열차 지안 통과
 - 오전, 지린 도착, 위원중학교와 베이산 공원 방문
- 8월 27일(금)
 - 오전 10시, 의전차량 창춘으로 출발
 - 오전 10시 30분, 창춘 난후(南湖)호텔 도착
 -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
- 8월 28일(토)
 - 오전, 농업박람회장 방문
 - 오후 9시 15분, 승용차 편으로 창춘 출발
- 8월 29일(일)
 - 0시, 하얼빈 도착, 화위안춘호텔 투숙
- 8월 30일(월)
 - 오전 8시 10분, 하얼빈 출발
 - 오후 1시 45분, 무단장 역 도착, 무단장 베이산공원 방문
 - 오후 2시 30분,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牡丹江)역을 출발, 귀국

2)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 관련 기사보도

- 함북 보안국, 김정일 귀국경계 ‘비상’(8/30, 자유북한방송)
 - 4박 5일 일정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30일 오전 귀국길에 오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맞기 위해 함경북도 인민보안국이 비상근무에 들어감.
 - 방송은 함경북도 청진시 통신원을 인용, “함북도 인민보안국이 오늘(30일) 아침 7시를 기해 이틀간의 비상근무에 들어갔다”면서 “이에 따라 보안원 200여명이 ‘충성의 근무’ 보위함을 갖고 화물트럭에 분승해 출동했다”고 밝힘.
 - 김정일 이동 행사에만 쓰이는 ‘충성의 근무’ 보위함에는 무단 침입자가 건드리면 벨이 울리는 전자감응식 코일이 들어 있는데, 인민보안국 요원들은 이 코일을 30cm 높이로 설치해 놓고 50m 간격으로 늘어서 경계를 선다고 방송은 설명
 - 통신원은 이어 “(투먼과 남양을 잇는) 남양철교는 지금까지 화물운송에만 이용됐고 열차로 이 다리를 통과한 고위급 인사는 1980년대 후야오방(胡耀邦)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뿐”이라며 “만일 ‘1호열차’(김 위원장 특급열차)가 남양철교로 들어올 경우 철로 상태가 좋지 않은 함북선을 타지 않고 라진을 거쳐 평양으로 향할 것”이라고 설명
- 무단장서 선친 유적지 방문(8/30, 연합뉴스)
 - 30일 오전 하얼빈(哈爾濱)을 출발, 귀국길에 오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투먼(圖們)으로 향하던 도중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牡丹江)에 들러 선친인 김일성 주석의 항일 유적지를 방문



- 무단장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하얼빈을 출발한 지 5시간여 만인 이날 낮 1시 45분께 무단장 역에 도착, 의전 차량으로 갈아 탄 뒤 동북항일연군(聯軍) 기념탑이 있는 베이산(北山)공원을 찾아 참배
 - 김 위원장 일행은 기념탑 참배를 마친 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다시 특별 열차에 올라 투먼 방향으로 향함.
 - 김 위원장은 방중 첫 날인 지난 26일 지린(吉林) 위윈(毓文)중학교를 찾은 데 이어 지난 29일에는 하얼빈 타이양다오(太陽島)의 동북항일연군 기념관을 방문하는 등 방중 기간 선친의 항일 유적지를 순례
- 中, 창춘서 북중정상회담 개최 확인(8/30, 연합뉴스)
- 베이징의 유력 외교소식통은 3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창춘(長春)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중국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창춘의 난후(南湖)호텔로 진입해 그 다음날 오전 9시 5분께 외출을 위해 호텔을 나서기 까지 머물렀음.
 - 후 주석은 김 위원장보다 먼저 난후호텔에 도착했으며 이날 오후 시간대에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
 - 소식통은 또 “관심의 초점이 된 김 위원장의 3남 정은은 중국측 (초청)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으나, 초청명단에 없다는 게 실제 김정일이 중국을 방중한 것인 지 그렇지 않은 것인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김정일, 투먼-남양 구간 통해 귀국(8/30, 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지난 다섯차례 방문에서 모두 신의주-단둥(丹東) 구간을 이용했으며 이번처럼 오갈 때 만포-지안(集安)구간과 투먼-남양 구간을 이용한 것은 이례적임.
 - 김 위원장은 남양에서 마중나온 북한 인사들로부터 간단한 환영인사를 받고서 특별열차 편으로 평양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일 “북·중 친선 바통 후대에 잘 넘겨야”(8/30, 조선중앙통신)
- 지난 26~30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마련한 환영 연회에서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 조중(북중)친선의 바통을 후대들에게 잘 넘겨주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7일 창춘(長春)시 난후(南湖)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만찬 연설을 통해 “대를 이어 조·중 친선을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
 - 김 위원장은 또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조·중 친선은 역사의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친선으로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조선 당과 정부의



- 변함없는 의지와 결심을 다시금 천명한다”고 밝힌 것으로 통신이 말함.
- 후 주석은 이에 대해 “중·조 친선을 시대와 더불어 전진시키고 대를 이어 전해가는 것은 쌍방의 역사적 책임이며, 중조 친선협조 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면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중조친선 협조관계를 진정으로 수호하며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화답
 - 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의 다른 의제들과 관련,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고 완전한 견해 일치로 보았다”고만 밝힌 채 더 이상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후 8시를 기해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일제히 전하면서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태종수 당 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장성택, 홍석형, 김영일, 김양건 당 부장,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가 동행했다고 소개했으나,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이 동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김정일, “6자회담 조속재개 희망”(8/30, 신화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7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원치 않는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후진타오 주석은 천안함 사건으로 조성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6자회담 국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후 주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장성명을 발표한 이후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동향이 나타났다”면서 “중국은 유관 당사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의 기치를 들고 현재의 긴장 국면을 완화하기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와 외부환경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말함.
 - 후 주석은 “양국간 각 분야 및 지역(성·도)간의 교류와 협력이 매우 활발하며 한반도 및 지역문제에서의 소통과 협력도 밀접하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후 주석은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양국 지도자가 각종 방식으로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확대 심화시키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해 나가자고 제안
 - 김 위원장은 후 주석의 양국 관계에 대한 평가와 3가지 제안에 전적으로



찬성했다고 통신은 전함.

- 후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간접적으로 촉구
- 그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민생개선 및 보장은 중국의 개혁개방 30여 년간의 경험”이라고 전제하고 “경제발전은 자력갱생도 중요하지만 대외 협력과 분리될 수는 없다”면서 “이는 시대조류에 순응하는 것이자 국가 발전을 가속화하는 필수적인 길”이라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함.
- 김 위원장도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북한의 민생 개선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
- 그는 자신을 역사적인 산 증인이라고 전제하면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빠른 발전을 이룩했고 어느 곳이든 생기가 넘친다”면서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건설하는 정책이 매우 정확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은 후 주석에게 “양국 선배 혁명가들이 피로써 맺은 북·중간 전통 우호관계는 매우 소중하다”면서 “각 분야별 지역별 교류협력과 양국 청소년간의 교류와 학습을 통해 양국 전통 우의가 부단히 발전해야 한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지린(吉林)성 지린시와 창춘시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등을 방문하면서 기계제조공장, 철도교통, 화학공업, 식품가공공장 등을 시찰, 중국의 동북지방 개발에 큰 관심을 피력하며, 부친인 고 김일성 주석의 모교 등 이른바 혁명 유적지도 함께 시찰
- 김 위원장은 후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동북 지방은 양국 우의의 발원지”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현장 방문 과정에서는 “동북 지방은 북한과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매우 유사하다”면서 “북한은 동북지방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개발방법과 경험을 열심히 연구할 것”이라고 말함.
- 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서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과 링지화(令計劃)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등 중앙과 지방의 지도자들이 함께 했다고 보도
- 통신은 북한 측에서는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태종수, 홍석형, 김영일, 김양건 당 부장,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 등이 동행했다고 소개

○ 김옥 추정 여성, 정상회담 배석(8/30,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넷째 부인으로 알려진 김옥(46)으로 보이는 여성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 방중에도 정상회담장에 모습을 드러냈음.
- 이날 김 위원장의 양옆으로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김기남 당비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 실세들이 배석했는데 바로 그 뒷자리에 앉음.
- 양국 회담 참석자들의 자리 앞에는 각각 중국어와 한글로 쓰인 명패가 놓여 있는데 유독 이 여성 앞에만 명패가 놓여 있지 않은 점 또한 이



여성의 ‘특수한 지위’를 짐작하게 함.

- 이 여성은 회담이 끝나고 후 주석이 마련한 환영 만찬에도 참석했는데 20여명이 앉은 헤드 테이블에 자리를 잡음.
- 김옥은 2006년 1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때 국방위 과장 자격으로 공식 수행했는데 당시 연회에서 후 주석 등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사실상 ‘퍼스트레이디’로 공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 北TV, 김정일訪中 기록영화 방영…‘활기찬 모습’(9/4, 조선중앙TV)

- TV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중국의 호금도 총서기와 상봉’이라는 제목으로 10분간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장면을 내보낸 뒤 곧이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이라는 제목으로 35분간 김 위원장의 나머지 방중 일정을 자세히 전함.
- 내레이션에서는 김 위원장 귀국 당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처럼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이 공동의 지역 문제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뒤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전했으며 내내 ‘조중친선’과 중국 동북지역의 발전상을 강조함.
- 회담 후 김 위원장은 후 주석과 나란히 앉아 중국측이 준비한 무용과 합창 등 예술공연을 관람했으며 공연 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을 고정하고 오른손을 이용해 박수를 칩.
- 이어 김 위원장은 부친 김일성 주석이 다녔던 지린(吉林)시 위원(毓文)중학교를 방문해 김 주석의 동상 앞에 고개를 숙였으며 환영행사 차 두 줄로 늘어선 학생들에게는 오른손을 흔들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기도 함.
- 김 위원장이 숙소에서 자신을 맞으러 나온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소파에 앉아 친밀한 표정으로 활짝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나옴.
- 창춘시의 농업박람회와 귀도객차공사, 하얼빈(哈爾濱)시의 해강식품공사와 전기그룹 등을 참관하는 장면도 방영됐으며 김 위원장은 안내원에게 질문을 하고 생산 제품을 만져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김 위원장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열차에 탑승한 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배웅을 나온 다이빙궈 국무위원 등에게 인사하기도 했으며, 영화는 말미에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함.



■ 김정일동향

- 8/26~30 김정일, 중국 비공식 방문(길림성·흑룡강성) 및 中 국가 주석 ‘호금도’(胡锦涛)와 정상회담 등 訪中결과 보도(8/30, 중·평방·중통)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기남(黨비서), 태종수(黨부장), 강석주(외무성 제1부상), 장성택·홍석형·김영일·김양건(黨부장들), 최룡해(黃北道黨 책임비서), 김평해(平北道黨 책임비서), 박도춘(자강도黨 책임비서) 등 김정일 訪中 수행
- 김정일, 4박5일간 길림성과 흑룡강성 등 동북지역 訪中 행보

방문 지역		주요 행적	참고
길림성	장춘(長春)	중국 국가 주석 ‘호금도’와 회담 및 연회(8/27, 남호빈관)참석·예술공연 관람 장춘농업박람회, 장춘궈도객차공사 참관 및 장춘시 야경 부감	中·朝친선 不變, 국제 및 동북아정세 관련 완전한 견해일치
	길림(吉林)	중국 국무위원 ‘대병국’과 담화 및 연회 참석 길림육문중학교 방문, 북산공원 약왕묘 참관 길림화학섬유그룹, 카톨릭교회당 건물 참관 및 길림시 부감	
	흑룡강성	하얼빈 할빈혜강식품공사, 할빈전기그룹 참관 환송 연회(흑룡강성당) 참석 후 귀국	‘대병국’ 등 전송

- 9/ 1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수 ‘김영환’, 문평제련소 지배인 ‘우두태’ 등에게 생일상 전달(9/1, 중방)
- 9/ 1 김정일, 평양국산공장 기술개건에 이바지한 기술자 등에게 「감사」전달(9/1,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의 김일성종합대학 혁명활동 시작 50돌 기념 중앙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8/31, 중방)
- 김영남, 최태복, 양형섭, 강능수(내각 부총리), 최희정(黨 부장), 김용진(교육위원장), 성자립(김일성종합대학 총장/보고) 등 참가
- 北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총 제65차 전원회의, 평양에서 진행. ‘김병팔’ 위원장을 건강상 관계로 해임하고 ‘현상주’를 새 위원장으로 선거(8/31, 중통)
- 黨 대표자회 대표자 선거를 위한 ‘황해북도(김만식: 黃北 당비서), 황해남도(서원철: 黃南 당비서), 남포시(강양모: 남포시당 책임비서) 黨 대표회들’ 진행(9/1, 중방)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057호, 8/24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등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 26호 모범기대영예상' 수여(9/1, 중방)
- 黨 평양시 대표회, 8/28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일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 및 집행부와 대표자들 선거(9/2, 중방)
- 김정일의 비공식 訪中(8/26~30)은 “전통不變의 中朝친선 진수를 보여줬다”며 북한은 “6자회담 재개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선군전통을 중시하는 나라의 외교방식에는 원칙에 어긋나는 양보는 없다”고 代辯(9/1, 조선신보)
- 김보현(김일성 祖父) 사망(1955/9/2) 55돌 관련 생애 그의 “조국애와 혁명위업” 회고, 칭송(9/1, 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궐 '정령', 駐말레이시아 대사에 장용철 임명(9/1, 중통)
- 社說, 김정일 訪中(8/26~30)을 “조-중 친선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키려는 역사적 사변”으로 평가하며 “黨 대표자회의 성과적 개최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진군” 선동(9/2, 중통·노동신문)
- 김보현(김정일 曾祖父) 사망(1955/9/2) 55돌 즈음 최태복, 양형섭 등 黨·政간부들, 만경대 묘에 헌화(9/2중통)
- 黨 대표자회 대표자 선거를 위한 '자강도(도당비서 김춘섭), 양강도(도당비서 김히택) 黨 대표회', 8/28 진행(9/3중방)

나. 경제

● 라선 국제가공무역지구로 개발(9/2, 연합뉴스)

- 구본태 북한 무역성 부상(副相)은 2일 “라선을 국제 가공무역지구로 육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힘.
- 이날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개막한 제6회 창춘국제무역박람회에 참석한 구 부상은 ‘동북아경제무역협작 고위층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이미 라선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했으며 이 특구를 국제적인 가공·중계 무역 지구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소개
- 구 부상은 이어 “이를 위해 행정적, 법률적 조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라진항을 포함한 라선시 개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음을 시사
- 그는 또 중국의 경제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 공동 번영을 이루려면 개발도상국 간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혀 중국과의 경협에 의욕을 보임.
- 구 부상의 이런 발언은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과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한 직후 나온 북한 고위 인사의 첫 공식 발언으로, 중국과의 경협을 통해 라선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



- 구 부상은 “미국의 부책임하고 투기적인 금융관리가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거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진행하는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과 전쟁 위협으로 동북아시아가 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국가 간 경제 발전과 협력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

● 北라진, 中과 해상운송 협약 체결(9/2, 연합뉴스)

- 북한 라선특별시가 2일 중국 훈춘(琿春)의 해운업체와 해상 운송 합작 협약을 체결
- 훈춘중련(中聯)해운공사와 라선시, 라진항, 라선대외운수회사는 이날 오후 제6회 동북아무역박람회가 열리는 중국 창춘(長春)에서 만나 라진항에서 컨테이너 운송선을 공동 운항기로 합의, 협약서에 서명
- 중련과 라선은 우선 라진-칭다오(靑島)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을 운항기로 했으며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면 한국과 일본 운항 노선도 개척할 계획
- 훈춘중련해운공사는 1998년 라진에 자회사를 설립, 라선시와 공동으로 4척의 화물선을 이용해 북한 내 해상 운송 사업을 펼쳐왔으며 지난 5월 훈춘시로부터 훈춘-라진 통로를 이용한 해상 운송 사업을 승인받았음.
- 중련은 라선시와 합작해 중국 동북지역의 물류를 북한 내 도로와 철로를 이용, 라진으로 수송한 뒤 해상 항로를 통해 중국 남방이나 해외로 운송할 계획
- 중련 관계자는 “금년 내에 라진항에서 출발하는 해상 항로가 개통될 것”이라고 말함.
- 이날 협약식에는 리룡시(李龍熙) 연변조선족자치주장과 김수열 라선시장, 배호철 라진항장 등이 참석

■ 기타 (대내 경제)

- 北 황해남도 배천군 ‘예성강6호발전소’ 준공식(8/31, 중통)
- 北 평양곡산공장, CNC화 실현으로 생산능력 3배 이상으로 확대(8/31, 중통)
- 北, 고압주파수변환기·고압배전반 등 전력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전자장치 도입으로 경제적 효과성 이룩 선전(9/2, 중통)

다. 사회·문화

● 北평북서 수해로 최소 70명 인명피해(8/31, 좋은벗들)

- 이달 중순의 집중호우로 북한 평안북도에서만 최소 70명(실종 포함)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압록강 유역의 농경지도 심각한 침수 피해를 봤음.



- 단체는 소식지에서 “현재까지 평안북도 지역에서 32명이 사망하고 38명이 실종됐다”면서 “그래도 올해는 북한 당국에서 제때 대피 신호를 보내줘 예년보다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밝힘.
 - 소식지는 이어 계속된 폭우로 압록강 수위가 높아지자 북한 당국이 수풍발전소 수문을 개방해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커졌다고 덧붙임.
 - 소식지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농경지인 신의주 위하도 상단리와 하단리, 의주군 룡운리, 룡계리, 수진리, 대화리, 식주군 청수노동지구 등에서 옥수수과 벼 피해가 특히 심하다”면서 “가을걷이(추수)만 바라보며 춘궁기를 견디던 주민들이 암담해하고 있다”고 전함.
 - 게다가 구호물품도 부족해 북한 당국은 수재민들을 세 등급으로 분류해 그릇, 세면도구, 이불 등의 구호물품을 차등분배할 예정이라고 소식지는 설명
 - 한편 국제적십자사(IFRC)는 지난 24일 보고서를 통해 “압록강의 범람으로 신의주 일대가 물에 잠겨 주민 14명이 사망하고 6만 4천여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전했고, 28일에는 “압록강 범람으로 피해를 본 북한의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특별예산 36만 8천 750달러(한화 약 4억 4천만원)를 긴급지원키로 했다”고 밝힘.
- **北통신, 첫 여성 배구 국제심판 장정향씨 소개(8/3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31일 “평양체육단 여자배구 감독인 장정향(38, 여)씨가 지난 6월 26일~7월 4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아시아여자배구클럽선수권대회 심판위원회 자격심의에서 국제배구연맹의 심판으로 정식 선발됐다”고 소개
 - 지난해 5월 후보심판 자격심의 합격 이후 1년여만임.
 - 통신에 따르면 중학교 때부터 선수로 활약하던 장씨는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한 뒤 여자 배구 감독으로 활약하다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외국어 실력’으로 북한 내에서 여자배구 국제심판 후보를 선정할 때부터 적임자로 꼽혔음.
 - 통신은 “장 심판이 얼마 전 있었던 국내 경기에서 국제심판으로서의 실력을 보여줘 전문가들과 애호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함.
- **北, 태풍 ‘곤파스’에 긴장…복상 소식 거듭 전해(9/1, 연합뉴스; 중앙TV)**
- 제7호 태풍 ‘곤파스’가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 태풍 복상 소식을 반복적으로 전함.
 - 중앙방송은 1일 “제7호 태풍 ‘곤파스’가 북상해 1일 밤부터 북한 일부 지역에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풍 경보’를 내리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모든 지역들에서는 태풍과 큰 물(홍수)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
 - ‘태풍 경보’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중앙방송 정규 뉴스 말미에 처



음으로 전해졌고, 이어 중앙방송이 오전 10시 40분과 11시 47분, 평양방송이 오전 10시 43분에 다시 전하는 등 이날 오전에만 네 차례 방송됨.

- 중앙TV는 자막으로 ‘곤파스’의 북상 소식을 전함.
- 방송은 “중심기압이 960hPa인 태풍7호가 시속 28km의 속도로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북서방향으로 이동해오고 있다”면서 “이 태풍의 영향으로 1일 밤부터 2일 밤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방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고

● 北신의주 농경지 92% 홍수 피해(9/1, 미국의 소리(VOA))

- 지난달 하순 압록강 범람으로 북한 신의주 일대 농경지의 92%에 해당하는 7천282ha가 홍수 피해를 봄.
- 방송은 유엔 피해조사단의 보고서를 인용, “피해 농경지에 재배되던 쌀, 옥수수 등 농작물도 침수(85%), 매물(14%), 유실(1%)로 못쓰게 됐으며, 관개시설 9곳이 파손됐다”면서 “수재민 대부분이 농부인데 집에 보관해온 식량도 모두 홍수에 쓸려갔다”고 말함.
- 이 피해보고서는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기구의 북한 상주 요원과 현지 직원들이 지난달 26~27일 신의주 일대를 현장 조사해 작성한 것이라고 방송은 설명
- 방송은 이어 “신의주 당국은 기반시설 복구에 40일쯤 걸릴 것으로 보고 당초 10일간으로 잡혔던 WFP의 긴급 식량지원 기간을 25일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식량 외에도 식수, 경구용 수액제(ORS), 필수 의약품 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현재 수재민들은 신의주 시내 학교 11곳과 천막촌에서 지내고 있는데, WFP의 영양비스킷 외에 북한 당국도 쌀, 옥수수, 감자를 섞은 비상식을 나눠주고 있지만 이 비상식 물량은 일주일만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방송은 덧붙임.

● 러, 벌목공 출신 탈북자 2명 내주 미국행(9/2, 자유아시아방송(RFA))

- 러시아 벌목공 출신 탈북자 2명이 한두 주 안에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예정
- 방송은 대북 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 관계자를 인용, “지난 3월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국 영사관에 진입했던 벌목공 출신 탈북자 2명이 내주쯤 미국으로 출발할 것”이라며 “이들은 5개월간 한국 측의 보호를 받다 지난달 25일 모스크바로 이동해 현재는 미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함.
- 관계자는 또 “이들 탈북자는 한국 영사관에 진입한 뒤 곧바로 미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혀 3월 중순 모스크바 주재 유엔 난민기구와 미 대사관 측 관계자와 면담했다”면서 “이들이 미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미국에서 신학공부를 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의 공보담당관은 “안전상 이유로 이들 탈북자의 난민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RFA에 말함.
 - 러시아의 북한 벌목공은 노임의 절반 가까이를 북한 당국에 바치는 데다 러시아 현지 연합기업소와 벌목장 사업소에도 돈을 떼여 평균적으로 월급의 17%(미화 70달러) 정도만 자기 손에 쥐 수 있다고 RFA는 덧붙임.
- **北, 구릉지경작 성과…‘남은 식량 내다팔 정도’(9/3, 미국의 소리(VOA))**
- 세계농림업센터의 동아시아 담당관인 쉰 지안추 박사는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헐벗은 언덕에 나무와 농작물을 심는 ‘경사지 관리법’을 2008년부터 현지에 전수하고 있다”면서 “덕분에 북한의 식량안보가 크게 호전되고, 참여 주민들은 당국에 할당량을 내고도 먹고 남은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고 말함.
 - 쉰 박사는 또 “주민들이 시범사업 참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다”면서 “종전에는 경사지에서 주로 옥수수와 감자를 수확했지만 이제는 밭벼, 채소, 고구마, 수박, 과일, 호두, 밤 등 다양한 작물을 심고 있다”고 덧붙임.
 - VOA는 “이 시범사업에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SDC)와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면서 “사리원시, 수안군, 황주군, 서흥군, 연산군, 연탄군, 름산군 등 황해북도 내 경사지 345ha에서 주로 가정주부나 은퇴한 노인들이 1인당 1만㎡씩 맡아 경작하고 있다”고 밝힘.
- **北평양서도 퇴근길엔 ‘닭발에 선술 한잔’ 인기(9/3, 조선신보)**
- 북한 평양에도 요즘엔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 ‘선술집’에 들러 닭발튀김이나 닭꼬치구이를 안주삼아 한잔 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짐.
 - 신보는 3일 “최근 평양에서 닭발, 닭내장 같은 닭 부산물로 만든 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하루 업무를 마친 근로자들이 많이 들르는 ‘광복결혼식 식당’의 경우 이런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는 손님이 매일 수백명에 달한다”고 소개
 - 이어 “이전에도 닭 부산물을 조리해 파는 식당이 없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닭공장들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요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다”고 말함.
- **평양 암시장서 한국산 봉지라면 판매(9/3, 교도통신)**
- 북한의 평양 시내 암시장에서 한국산 제품들이 팔리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이 신문은 7월말에 평양 서성구역의 암시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입수했다며 한 여성이 좌판에 한국산 ‘신라면’과 ‘김치라면’ 등을 진열해 놓고 파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함께 공개



- 주로 야채나 과일, 물고기, 소고기 등을 팔고 있는데, 약 50cm 길이의 물고기 한 마리가 북한 돈 1천500원, 한국산 봉지라면은 500원에 팔리고 있었음.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평양출판사, 圖書 '민족설화의 세계'(1, 2) 새로 출판(8/30, 중통)
- 전국 붉은청년근위대(9/12, 창건 40돌)원들의 국방체육경기대회, 8/26~ 역포구역 용산리에서 진행(평양시와 각도 선발 360여명) 및 8/31 폐막(9/1, 중방)
- 함흥문화전시관(연건평 5천㎡) 개관식 진행(9/1, 중통)
- 경희극 '산울림'의 10여 일간 함흥시 공연성과 선전(9/1, 중방)
- 北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구려 벽화무덤(평양시 낙랑구역 동산동) 발굴(9/2중통)
- 김일성상 계관인이자 인민예술가인 고려청자 거장 '우치선'(1919/11~2003/11)과 '임사준'(1921/8~2007/4) 소개(9/2, 중통)
- 태풍7호 '곤파스'의 영향으로 北 여러지역에서 폭우와 강풍 발생(9/2, 중통)
 - 黃南 태탄군 74mm(9/1 20시~21시), 수안군 65mm(21시~24시), 9월 1일 오전 6시~2일 오전 6시 사이 강원도 원산시 167mm·봉천군 165mm, 黃南 신천군 154mm, 黃北 송림시 152mm의 폭우, 강원도와 함경남도 일부지방 황해남도 대부분 지방에서 초속 10~18m의 강풍
- 북한 추석 및 13~15일, 제8회 '대황소상 전국민씨름경기'대회 개최(9/3, 조선중앙TV)

2. 대외정세

● 北김영남 “중국군과 협력 강화할 것”(9/1, 신화통신)

- 북한의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일 “북한은 앞으로 중국과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공고하게 발전시키고 북중 양국군의 우호협력관계 강화에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평양발로 보도
-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선양(瀋陽)군구 사령관인 장요우샤(張又俠) 중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함.
- 김 상임위원장이 중국과의 군사 분야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최근 한미 양국의 동·서해 합동군사훈련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김 상임위원장은 “북·중 양국은 최고 지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혁명1세대들의 노력으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더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

- 이에 장 중장은 김 상임위원장에게 중국 지도부의 인사를 전한 뒤 중국도 양국 우호관계 강화를 희망한다면서 선양군구는 양국의 군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화답
- 이날 접견에는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박재경 인민군 대장이 배석
- 선양군구 대표단은 지난달 25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같은 달 31일 김영춘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을 만남.

● 北노동신문, 中 개혁개방 경제발전 ‘극찬’(9/2, 노동신문)

- 신문은 2일 ‘조·중(북·중) 친선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획기적 사변’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오늘날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나라의 번영을 담보하는 비약적 발전이 이룩되고 있다”면서 “호금도(후진타오)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중국 인민은 등소평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의 가치를 내걸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고 호평
- 신문은 이어 “우리 인민은 중국의 면모가 나날이 달라지고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있는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중국 인민의 사회주의 위업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고 있다”면서 “중국 인민이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전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진전을 이룩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임.
- 사설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높게 평가한 뒤 “우리 인민은 새로운 신심과 낙관에 넘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면서 “세기를 이어오는 조·중(북·중)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당과 인민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강조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 베트남 軍 정치일꾼 대표단과 담화(8/30, 중통) 北-쿠바 외교 관계 설정 50돌 기념우표(소형전지 1종) 발행식, 김형준(외무성 부상)·허성길(국가우표발행 국장) 등 참가下 조선우표전시관에서 진행(8/30, 중통)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최영림(내각 총리), 말레이시아 국경절 즈음 同國 국왕과 수상에게 각각 축전(8/30, 중통)
- 김영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독립 48돌 및 키르기스스탄 국경절 즈음 各國 대통령에게 축전(8/31, 중통)
- 北-쿠바 외교관계설정 50돌 즈음 중앙기념집회, 8/27 권승철(쿠바 駐在 北 대사) 등 참가下 쿠바에서 진행(9/1, 중통)
- 김영남, 리비아 9월 1일 혁명 41돌 즈음 ‘카다피’ 국가원수에게도 축전(8/31, 중통)



- 김영남, 우즈베키스탄 독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9/1, 중통)
- 김영남과 최영림 내각 총리, 슬로바키아 헌법절 즈음 同國 대통령과 수상에게 각각 축전(9/1, 중통)
- 베트남 정부수상, 8/31 최영림 내각총리에게 신의주시 수해관련 위문전문(9/2, 평방)

3. 대남정세

- **北신문, 9월 한미훈련에 “전투동원태세 만반” 위협(8/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월 초 서해상에서 실시될 한미연합대잠수함 훈련에 대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단매에(일격에) 짓뭉개버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최근 남조선 전역에서 괴뢰들과 함께 핵시험 전쟁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 군사연습을 강행한 미국이 9월 초 서해에서 또 반잠수함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미국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군사전략적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
- **北, 한미 대잠훈련에 또 “무자비한 타격” 위협(9/3, 우리민족끼리)**
 - 사이트는 이달 5~9일 서해에서 실시하는 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에 대해 “호전광들이 분별을 잃고 무모한 도발에 나서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자비한 타격으로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
 - 사이트는 논평에서 “미국은 이번 ‘연합 대잠수함훈련’ 이후에도 연말까지 10여 차례의 합동군사연습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병력과 전쟁수단들을 항시적인 공격상태에 뒀다가 임의의 순간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것”이라고 주장
- **北, 南드라마·불법 휴대전화 강력 단속(9/4,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경찰 장비를 지원받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한국 드라마 시청은 물론 국경지역의 불법 휴대전화 사용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전함.
 - RFA는 국경 지역의 보위부와 접촉했다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보안 당국이 중국으로부터 금속탐지기와 같은 새 장비를 지원 받았으며 이 장비로 불법 휴대전화 보유 및 남한 드라마 소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함.
 - 이 소식통에 따르면 예전엔 배터리를 분리해 놓으면 불법 휴대전화 탐지가 어려웠지만 요즘은 장비의 현대화로 이런 방법이 소용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만 수십 명이 휴대전화를 빼



았겠다고 함.

- 또 한국의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이들도 가택 수색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임.
- 탈북자 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북한이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려고 만든 '130상무'가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들에 대해서도 단속하고 나섰다고 전함.
- 소식을 전한 통신원은 “과거에는 간부의 집을 검열할 엄두도 내지 못하다가 130상무가 조직되면서 간부들도 검열 대상에 들어갔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3단계 통일방안」제안 관련 “남북관계의 구체적 현실을 외면한 실천성 없는 공리공담, 불순한 반통일각본”이라고 持續 비난(8/30, 중동·노동신문·평방)
- 訪北 한상렬 목사 구속 관련 “온 거래는 이○○ 역도의 파쇼적 탄압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즉시 석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선동(8/30, 평·중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한미, 대화위한 北태도 변화 압박>(9/4)

-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제재 국면을 이어가되 북한의 신뢰할만한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놓고 대책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보임. 워싱턴을 방문중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 북핵특사 등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과 중국의 잇단 '6자회담 재개 공세'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음.
- 북한 입장에 우호적인 중국 정부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스타인버그 부장관을 만나고 간 지 이틀만의 일임. 일단 한미 양국은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주장을 답석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됨. 북한과의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건이 성숙돼야 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임.
- 위 본부장은 국무부 당국자들과의 회담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부분이 북한에 달려있다"며 "북한의 책임있는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음. 천안함 사태 등에 대한 북한의 행동이 있고난 이후에 이를 총체적으로 평가, 향후 대화에 나설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음. 다만 그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와 관련, "천안함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 정부가 요청하는 사안들은 다 그대로 있으나, 비핵화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연계되느냐는 것은 총체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 여운을 남겼음. 이는 전체적으로 지난 1일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던 기조와 맥을 같이 함.
- 크롤리 차관보도 당시 북한이 앞으로 '수 주일'내에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취하길 기대한다며, 북한이 취할 행동으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인정,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약속이행,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금지 등을 나열한 바 있음. 따라서 한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일단 공을 북한 쪽에 되돌려 줬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과 제2차 핵실험에 이어 올해에는 천안함 사태 등 대화단절의 원인제공을 해왔던 만큼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선 셈임.
- 위성락 본부장은 "무슨 수학 공식처럼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된다'고



-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며 “북측으로부터 좋은 행보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을 것이고, 나쁜 대응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비핵화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하는 등 ‘좋은 행보’를 보이면 ‘6자회담 재개’로 보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짐.
- 그러나 당장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임. 우선은 이달 중순 유엔총회 기간에 6자회담 당사국들간의 직·간접적인 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 작업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임. 위 본부장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접근방식’의 근간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대화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도 하고, 북한으로부터 변화된 태도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여건조성’이라고 것은 북한이 믿을만한 행동을 보이도록 한·미 양국은 물론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설득하고 압박하는 외교전을 전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 모색없는 대북 제재 국면은 계속될 공산이 큼.

● 한·미, 6자회담 재개 여건조성 노력키로(9/2)

- 한국과 미국은 3일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라는 ‘투트랙’ 접근법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키로 했음. 미국을 방문중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장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 북핵특사 등과 잇따라 면담하고 북한문제를 협의했음.
- 위 본부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투트랙 어프로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나아가기로 했고,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각자 노력해 가자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위 본부장은 “많은 부분이 북한에 달려 있으며, 북한의 책임있는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행동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6자회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6자회담으로 가는 것이 이르다(premature)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 북한의 태도 변화가 6자회담 재개에 앞서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음. 그는 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태도 변화 내용과 관련, “수확공식처럼 뭘 하면 뭐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북측으로부터 좋은 행보가 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을 수 있고, 나쁜 대응은 그렇지 않다(보상이 없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북한으로부터의 좋은 행동과 태도들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그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와 관련, “천안함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 정부가 요청하는 사안들은 다 그대로 있다”면서 “그러나 비핵화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연계되느냐는 것은 총체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북한의 행동은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는 천안함도 있고, 비핵화에 대한 행동들도 있다”면서 “하나하나를 따지기 보다는 북한의 행동 전반을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밝힌 영변 핵시설 불능화, 국제사찰단 복귀 등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행동을 예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번 달 유엔총회 기간을 전후해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유엔 총회가 많은 대화들이 이뤄지는 계기는 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그때부터 뭐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중국측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中, 6자회담 조속한 재개 촉구(9/2)

- 중국 정부는 2008년 12월 이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유관 당사국들은 소통과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유관 당사국의 공통된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6자회담은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는데 가장 유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국제 분쟁의 실마리를 해결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면서 “한반도 정세가 민감하고 복잡한 현 상황에서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각국간)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미국을 방문 중이라며 자국의 6자회담 재개 노력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우 특별대표의 방문 목적은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 등 유관 문제에 대해 당사국들과 협의하고 각국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6자회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각국의 공통된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각국의 일치된 견해”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문제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궤도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특별대표는 최근 북한과 한국, 일본 방문에 이어 미국을 방문했으며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6자회담 참가국 순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중국은 천안함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6자회담 국면으로 전환을 희망하면서 회담 재개를 적극 중재하고 있지만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이는 조속한 6자회담 재개가 어렵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입장이어서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는 당분간 쉽게 마련되지 않을 전망이다.

● <美 제재국면속 北대화 진정성 타진>(9/2)

- 미국이 대북 제재국면 속에서 6자회담 재개를 원하는 북한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적극 타진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음. 미국 국무부는 1일 정레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취해야할 선행조건의 밑그림을 큰 틀에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화답'이 앞으로 '수 주일'내에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통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음.
- 이틀 전 재무부를 통해 북한의 핵심기구인 '39호실'과 '정찰총국'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올리며 대북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태도임. 제재와 동시에 대화도 병행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북한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6자회담 재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걷어내라"고 촉구한 것임.
- 먼저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두 차례에 걸쳐 "앞으로 수 주간(coming weeks) 북한이 보일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또 "협상테이블에 복귀하겠다는 공개적인 언급으로만은 미흡하다"고 '행동'을 되풀이 요구하며, '현 상태로부터의 진전(advance)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크롤리 차관보가 제시한 기간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겹치는 시기임. 국무부의 입장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 대표도 참가하게 될 유엔총회라는 공간에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위한 가시적인 행동을 보이려는 완곡한 주문으로 들림. 특히 크롤리 차관보는 올해 봄 6자회담 재개 직전까지 갔던 시점으로 되돌아갈 용의가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음. 당시 대화 재개 분위기를 깬 사건이 천안함 문제만큼 북한이 이에 책임을 지겠다는 사과 표시를 해야 "그에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임.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지는 모습은 미국 뿐 아니라 한국도 지켜보길 원하는 문제라고 크롤리 차관보가 언급한 대목은 북한이 천안함 이후의 '출구'를 찾길 원한다면 책임지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됨.
- 이와 함께 2005년 9.19공동성명의 비핵화 약속대로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발사도 중단하는 등 단순한 언어적 유희가 아닌 믿을만한 구체적 행동을 보여줘야만 앞으로 북한이 희망하는 추가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미 국무부는 분명히 했음.
- 미국은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면,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나머지 국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 행동의 진정성을 평가한 뒤



6자회담 재개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크롤리 차관보는 “중국은 중국대로의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이 있으며,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 협의를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하지만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음.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이날 버지니아 관티코의 미 해병대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위기’ 주제 세미나에서 특별연사로 나와 “중국이 3단계 방안을 제시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6자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6자회담 재개여부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천안함 국면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북한이 이 문제에 사과를 하라는 한국과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현실론에 뿌리를 두고 있음. 결국 유엔총회를 전후해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분주한 외교전을 통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속내 타진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상호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밟게 될 전망이다.

● 스타인버그-위성락 3일 북한문제 협의(9/2)

- 미국 국무부는 1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과 위성락 외교 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3일(미국 시간)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이번 한·미 고위 당국자간 회동은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의 방미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대북제재 이행 및 6자회담 재개문제 등 이른바 ‘투트랙’ 접근방식을 놓고 한·미간에 심도있는 의견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임. 위 본부장은 2박3일에 걸친 방미기간 스타인버그 부장관과의 회담 이외에도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김 6자회담 특사 등과도 면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전반적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北, 9월에 추가 핵실험할 수도” <전문가>(9/2)

- 미국 터프스대학의 이성운 교수는 북한이 지난 1960년대 이후 일관되게 보여온 협상전략을 감안할 때 빠르면 이달중에 추가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26일 미국의 외교전문잡지인 ‘포린어페어스’ 온라인판에 기고한 ‘북한의 각본’이라는 글에서 “북한은 적들이 약해 보이거나 자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는 국제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판을 키운 뒤, 평화라는 신기루 같은 약속을 대가로 양보를 받아내는 협상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음. 이 교수는 “이런 궤적을 토대로 판단할 때 북한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각본에 굴복하지 않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내년 초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 개월 내에 추가(제3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점쳤음. 특히 이 교수는 북한 정권수립일인 9.9절 전날인 9월8일과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10월10일을 북한의 추가 핵 실험이 가능한 날로 꼽았음.

- 그는 이달초 열리는 북한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김정은)가 공식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또 한차례의 부자세습은 군사적 힘의 과시를 통해 정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핵실험 가능성의 설득력을 높여준다고 지적했음.
- 그는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취약한 부분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북한의 ‘공정 경제’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현금흐름을 차단하고,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 엄중한 자세를 견지해야만 한다”고 주문했음.

● 위성락, 내일 방미 출국..‘6자-대북제재’ 협의(9/1)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이자 천안함 후속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고 외교소식통들이 1일 전했다. 위 본부장은 2박3일에 걸친 방미기간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김 6자회담 특사를 비롯한 미 국무부 당국자들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전반적 현안을 논의할 예정임.
- 위 본부장은 미국측과의 협의에서 천안함과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가시적인 태도변화를 보이기 전까지는 6자회담 조기 재개에 응할 수 없고 현행 제재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전반적 행태를 평가해서 긍정적 태도가 나타날 때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본부장은 또 내달 중·하순 6자회담 관련국 대표들이 모두 모이는 유엔 총회 기간 이뤄질 양자 및 다자접촉과 관련한 한·미간 공조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中 “6자회담 재개 위해 새 제안하겠다”(8/31)

- 일본을 방문 중인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관계국에 ‘새로운 제안’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일본은 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음. 6자회담 수석대표이기도 한 우다웨이는 이날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무상과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을 만난 뒤 기자단에 “(새 제안)을 관계국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각국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 우 대표는 또 오카다 외상과의 회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북한 측은 정치 대화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다”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향한 환경 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으로 알려졌음. 이에 대해 오카다 외상은 “(6자회담 장기 중단이라는) 현재 상황을 만든 것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반론을 폈지만 “핵무기나 미사일 폐기로의 길이 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는 6자회담 재개에 응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센고쿠 관방장관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이 도발적인 언동을 자제하고, 한국 등 관계국과 신뢰회복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건을 열거했음. 이와 관련해 교도 통신은 5월에만 해도 “6자회담을 열 상황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던 일본 정부가 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음.
- 그 배경에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요구를 언제까지나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풀 수 있는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초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분석했음.

● 김정일, “6자회담 조속재개 희망”(8/30)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중국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관영 신화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7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30일 보도했음. 김 위원장은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원치 않는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후진타오 주석은 천안함 사건으로 조성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6자회담 국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후 주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장성명을 발표한 이후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동향이 나타났다”면서 “중국은 유관 당사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의 가치를 들고 현재의 긴장국면을 완화하기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음.
- 후 주석은 “양국간 각 분야 및 지역(성·도)간의 교류와 협력이 매우 활발하며 한반도 및 지역문제에서의 소통과 협력도 밀접하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후 주석은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양국 지도자가 각종 방식으로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확대 심화시키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해 나가자고 제안했음. 김 위원장은 후 주석의 양국 관계에 대한 평가와 3가지 제안에 전적으로 찬성했다고 신화통신



은 전했다.

- 후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간접적으로 촉구했음. 그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민생개선 및 보장은 중국의 개혁개방 30여년간의 경험”이라고 전제하고 경제발전은 자력갱생도 중요하지만 대외협력과 분리될 수는 없다면서 “이는 시대조류에 순응하는 것이자 국가발전을 가속화하는 필수적인 길”이라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했음. 김 위원장도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북한의 민생 개선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음.
- 그는 자신을 역사적인 산 증인이라고 전제하면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빠른 발전을 이룩했고 어느 곳이든 생기가 넘친다”면서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건설하는 정책이 매우 정확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 김 위원장은 후 주석에게 “양국 선배 혁명가들이 피로써 맺은 북중간 전통 우호관계는 매우 소중하다”면서 “각 분야별 지역별 교류협력과 양국 청소년간의 교류와 학습을 통해 양국 전통 우의가 부단히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음.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은 삼남 정은으로의 후계체계 구축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양국간 우호협력이 세대를 뛰어넘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후계구도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지린(吉林)성 지린시와 창춘시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등을 방문하면서 기계제조공장, 철도교통, 화학공업, 식품가공공장 등을 시찰, 중국의 동북 지방 개발에 큰 관심을 피력했음. 그러면서 부친인 고 김일성 주석의 모교 등 이른바 혁명 유적지도 함께 시찰했음.
- 김 위원장은 후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동북 지방은 양국 우의의 발원지”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현장 방문 과정에서는 “동북 지방은 북한과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매우 유사하다”면서 “북한은 동북지방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개발방법과 경험을 열심히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음.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서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과 링지화(令計劃)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등 중앙과 지방의 지도자들이 함께 했다고 보도했음. 통신은 북한 측에서는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태중수 홍석형.김영일.김양건 당 부장,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 등이 동행했다고 소개했음.
- 이날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은 관영 중앙(CC)TV를 통해서도 보도됐으며 CCTV 화면에는 이들 외에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왕자루이(王家瑞)공산당대외연락부장,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천더밍(陳德銘)상무부장,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류제이(劉結一)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등의 모습이 공개됐음.

● <김정일訪中> 中, “6자회담 재개 고삐 질듯”(8/30)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4박5일간 방중이 마무리되면서 중국이 북핵 6자회담 재개의 고삐를 바짝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이미 16~18일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북을 통해 회담재개를 위해 모종의 실무합의를 한데 이어 이번에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두 정상에 6자회담 조속재개라는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임. 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으며 한반도 정세 긴장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중국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후 주석 역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6자회담 국면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음.
- 물론 북중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주요 당사국인 미국 등의 요구에 맞는 ‘진전된’조치에 합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일단 실천의지를 강하게 나타냄으로써 1년반 이상 교착돼온 6자회담 재개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임.
- 일각에서는 김정은으로의 후계를 공식화할 다음달 초순 노동당대표자대회를 앞두고 중국의 정치적인 동의와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이 이번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통큰’양보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북한이 천안함 사건 발생 이전인 작년 11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통한 대화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해제와 평화협정 우선 논의를 주장하면서 버텼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해 변화가 있는 지도 주목되고 있음.
-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끊임없이 공을 들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 우선 조지 부시 미 행정부 시절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시작된 6자회담을 중국이 의장국으로 나서 외교력을 발휘함으로써 국제 외교무대에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애착은 큼. 아울러 중국은 절체절명의 과제인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구축이 필요조건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6자회담 만한 솔루션이 없다고 보고 있음. 무엇보다 6자회담은 후 주석의 최대 외교치적으로 꼽히고 있음.
- 여기에 중국은 올들어 봉착한 일련의 안보 위기도 6자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듯함. 미 항모인 조지 워싱턴 호의 서해 진입 위협과 미국-베트남 합동군사훈련으로까지 이어진 남중국해의 미중 갈등 국면에 대해 중국은 6자회담 재개로 이를 대화 국면을 바꾸려 한다는 지적임. 다시 말해 중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천안함 사태이후 그 원인 규명을 놓고 야기된 ‘북한-중국 대 한국-미국-일본’대립구도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북한-미국



- 중국-일본-러시아 간 머리를 맞댄 대화 국면으로 일거에 바뀔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임.
 - 중국은 특히 미국에 공을 들일 태세임. 천안함 사태 이후 동맹인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대북 강경노선을 보여온 미국에서 최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고 보고 이를 파고 들겠다는 눈치임. 실제 미국 내에서 오는 11월 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 보다는 경제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에 대한 기존의 강경일변도 외교정책을 재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전언임.
 - 이달 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부처 고위급 인사를 중심으로 대북정책 평가회의를 가진 게 단적인 예로, 이 회의는 대북정책에 새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지난 1994년 제 1차 북핵위기 때 한 차례 북미간 평화 특사 노력을 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미국인을 석방해 데려온 점도 북미간 긴장완화 조짐이라는 분석도 있음. 따라서 중국은 미국 내 대북 온건파를 집중 공략해 북핵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설득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회담 재개로 잇는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단기적인 대미 외교노력은 두 갈래의 경로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됨. 한 축이 이미 미국으로 간 우다웨이 특별대표라면 다른 한 축은 조만간 방미할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임.
 - 우 특별대표는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보즈워스 특별대표를, 추이 부부장은 통상적인 카운터파트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등을 통해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전하고 협력을 구할 것으로 보임. 중국은 아울러 다음달 중순 이후에 개최될 유엔 총회에서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세력 규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런 탓에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반응이 향후 6자회담 재개 노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美보수지, 북핵 6자회담 재개가능성에 췌기”(8/30)
- 최근 북한, 미국, 중국 사이에 외교적 흐름이 두드러지자 강경한 대북 압박 정책을 지지해온 미국의 보수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이 오바마 행정부를 향해 “북한 정권의 사망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압박을 지속”할 것을 주문하는 등 대화정책으로 회귀 가능성에 췌기를 박고 나섰다. 이 신문은 ‘지미 카터의 평양 방문’이라는 제목의 30일자 사설에서 북한, 미국, 중국의 최근 일련의 움직임을 가리켜 “이러한 갑작스러운 외교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이들 사안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 신문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외교적 해결 노력과 실패 사례를 들며 “진정 미국과 동맹들은 또 다른 제네바합의를 맺으려 하는가?”라고 묻고 “북한의 의도에 대해 환상을 품기보다 더 좋은 전략



은 북한 정권의 사망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압박을 지속하면서 한국이 이미 하고 있는 대로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음.

- 신문은 북한을 둘러싼 “갑작스러운 외교 바람”들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사적인” 인도주의적 방문이라고 규정했지만 어쨌든 방북을 공식 허가한 사실, 카터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하루 더 체류한 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 북핵 6자회담의 재개 희망을 피력한 점을 들었음.
- 또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같은 입장을 전달한 사실,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같은 “비둘기파”가 뉴욕 타임스를 통해 역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한 점 등도 이 신문의 경계심을 자극했음.
- 신문은 “지금 6자회담으로 돌아간다면 또 다시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은 북한의 “취약성의 표시이지 힘의 표시가 아니다” 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6자회담은 “북한 정권에 군사력 강화와 국내적 권력 강화의 시간을 벌어주고, 중국에는 6자회담의 방해자이면서도 6자회담을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를 줌으로써 북한과 중국에 이로운 것”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음.

● 홀게이트 美NSC국장 “北핵거래 글로벌안보 위협”(8/30)

- 로라 홀게이트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테러담당 선임국장은 30일 “북한의 불법 핵 거래가 글로벌 핵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고 말했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날 열린 ‘국제 핵안보 워크숍’ 참석차 방한한 홀게이트 국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핵안보 이슈, 특히 핵물질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가장 큰 우려는 북한이 핵기술을 다른 국가들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핵위협방지구상(NTI)의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미 에너지부에서 추진한 플루토늄 제거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음. 홀게이트 국장은 북한이 핵기술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단체로 미얀마와 시리아, 그리고 알 카에다를 지명하며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이 이러한 통로를 통해 이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음. 이어 그는 “매우 걱정스런 상황”이라며 핵관련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핵탐지 기술 강화를 제시했음.
- 홀게이트 국장은 또 “핵안보는 글로벌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며 “각국이 핵안보 강화의 필요성과 위협 요소를 인식하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음. 한편 그는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와 관련, “핵안보와 관련한



높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를 이뤄냈다”며 “다음 단계를 위한 노력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과 미 조지아대 국제통상 및 안보센터(CITS)가 공동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2012년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와 핵안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린 것으로, 장상구 KINAC 원장을 비롯해 이르고 크리프노프 CITS 센터장 등 국내외 핵안보 전문가 7명과 정부 및 학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벌였음.

나. 미·북 관계

● 美, 북한내 미군유해 발굴 재개의지 확인(9/4)

- 미국 국방부는 북한 지역 내에 남아있는 미군유해 발굴작업을 재개할 의지가 있음을 거듭 확인했음. 미셸 플라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8월26일 열린 ‘한국전·냉전 실종자 및 전쟁포로 가족연합’ 주최 행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나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북한에서의 유해발굴 작업 재개를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음.
- 3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플라노이 차관은 이같이 밝히면서도 천안함 사건을 비롯한 최근 한반도 상황을 거론하면서 “하지만 이(유해발굴 재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언제 유해발굴이 재개될 수 있을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유해발굴 재개와 관련한 현재의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간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것이며, (유해) 발굴 작전 재개를 위해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군인들을 고향으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현재 북한 내에 5천400여구에 이르는 미군 유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900여구의 유해는 비무장지대 내에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음. 그는 미군 전쟁포로 등이 북한 지역 내에 생존해 있을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있다는 확증을 우리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실종된 군인들의 운명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음. 미국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에서 미군 유해 공동 발굴작업을 벌여 225구 이상의 시신을 발굴하고 그중 81구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유해발굴 비용으로 북측에 2천80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북한 지역 내 미군 유해발굴 작업은 2005년 5월 북핵문제로 북미관계가 악화된 뒤 중단됐고, 북한은 올들어 미군유해 발굴 재개를 제안해 왔음.

● <美,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13551호’>(9/2)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명한 추가 대북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은 ‘13551호’인 것으로 나타났음. 미 연방관보는 1일(미



국시간) ‘북한과 관련된 특정 인물들의 재산을 차단한다’는 제목의 행정명령 13551호를 게재한 것으로 2일 확인됐음.

- 지난 8월30일을 기해 효력을 발휘한 이번 13551호는 13466호에 나열됐던 ‘국가 긴급상황(national emergency)’의 범주에다 북한의 사치품 조달행위, 돈세탁을 비롯해 현금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추가한 것이 특징임.
-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당시 발표됐던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WEA)의 적용대상에서 풀어주면서 ‘안전장치’ 격으로 북한의 여전한 핵확산 위험과 무기급 화석연료의 존재를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북한 재산의 동결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었음.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의 핵확산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행정명령 13466호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북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1994년 11월 핵확산 및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돼 나온 12938호,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때인 2005년 6월 대량살상 무기 확산국가 및 조력자들에 대해 재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한 13382호가 있음. 한편 대북 강경론자인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 상원의원은 이번 행정명령 13551호 발효와 관련, 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금융제재는 분명히 올바른 방향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평가했음. 그러나 브라운백 의원은 “미국은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과 인권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따라서 재무부와 국무부는 새롭게 확대된 제재를 즉각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음.

● “러 벌목공 출신 탈북자 2명 내주 미국행”<RFA>(9/2)

- 러시아 벌목공 출신 탈북자 2명이 한두 주 안에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전했다. 이 방송은 대북 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 관계자를 인용, “지난 3월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국 영사관에 진입했던 벌목공 출신 탈북자 2명이 내주쯤 미국으로 출발할 것”이라며 “이들은 5개월간 한국 측의 보호를 받다 지난달 25일 모스크바로 이동해 현재는 미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음. 이 관계자는 또 “이들 탈북자는 한국 영사관에 진입한 뒤 곧바로 미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혀 3월 중순 모스크바 주재 유엔 난민기구와 미 대사관 측 관계자와 면담했다”면서 “이들이 미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미국에서 신학공부를 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의 공보담당관은 “안전상 이유로 이들 탈북자의 난민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RFA에 말했음.
- 러시아의 북한 벌목공은 노임의 절반 가까이를 북한 당국에 바치는 데다 러시아 현지 연합기업소와 벌목장 사업소에도 돈을 떼여 평균



적으로 월급의 17%(미화 70달러) 정도만 자기 손에 쥌 수 있다고 RFA는 덧붙였다.

● “美, 북한 돈줄 죄며 압력 강화” <르피가로>(9/2)

-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는 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을 굳건히 지키며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한 새로운 제재에 나서는 등 대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르 피가로는 이날 ‘워싱턴, 대북 압력 강화’라는 제목의 베이징발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요청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북핵 6자회담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기존 대북제재에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김정일 북한 정권의 자금줄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대북 제재는 신비에 싸인 ‘39호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39호실을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와 그 측근들에게 마약밀매와 무기밀매를 통해 통치자금과 사치품을 조달하는 임무를 띤 비밀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르 피가로는 미국 행정명령이 북한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외국은행들과의 거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중국 공산당 당교장량위 교수의 말을 인용해 중국으로서는 내키지 않겠지만 중국의 은행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음. 이 신문은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체제 붕괴를 야기할 지도 모를 새로운 도발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 긴장국면을 완화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새롭게 외교력을 가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압력에 6자회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회담 재개의 선행조건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지와 같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주길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 “美정부, 北의약품 지원에 75만달러 지출” <VOA>(9/2)

- 미국 정부가 북한에 홍수 구호품을 제공할 예정인 민간단체들에 의약품 구매자금 명목으로 미화 75만달러(한화 8억8천만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일 전했다. 미국 정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는 1일(현지시간)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정부는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를 본 북한에 제공될 의약품 구매자금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75만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면서 “이 돈은 대북 민간구호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머시코’ 세 곳에 균등히 분배됐다”고 말했다.
- 2일 중 평양에 공수될 ‘사마리탄스 퍼스’의 구호품 90t 중에는 미 정부가 자금을 낸 25만달러 어치의 의약품이 포함돼 있는데, 북한의



올해 수해와 관련해 미 정부 자금으로 마련된 구호품이 전달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VOA가 설명했다.

- 킹 특사는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와 ‘머시코’가 지원하는 의약품도 다음 주 평양에 수송될 예정”이라면서 “이들 단체와 북한 당국 사이에 구호품 분배 감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이번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미 정부는 2007년에도 홍수 피해를 본 북한에 10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다.

● 카터, 美 국무부에 방북 결과 설명(9/1)

-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31일 미 국무부에 방북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주 아이잘론 말리 고프스(31) 씨를 데리고 돌아온 카터 전 대통령이 이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방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미 관리들이 전했다. 하지만 카터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 미국 정부는 카터가 고프스 씨를 석방하는 사적인 임무만을 지니고 방북했다고 밝혔지만, 카터 전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 의지를 표명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회담 재개 전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2005년 비핵화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갈 준비가 됐다는 증거가 보이면 우리는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1일 워싱턴을 방문하는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중국의 견해를 우리에게 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北 전병호, 윤호진 무기밀매 핵심역할”(8/31)

- 북한 남천강무역회사의 윤호진(66) 대표와 그의 장인인 전병호(84)가 북한의 무기밀매 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로 드러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 보도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30일 발표한 새로운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된 윤호진은 지난 2002년께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우라늄 농축에 사용할 알루미늄관 등을 조달한 책임자로 지목돼온 인물임. WSJ는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인 전병호가 이번 새 제재대상에 포함된 제2경제위원회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제2경제위원회는 김정일의 비자금과 무기밀매를 담당하는 99호실을 관할하고 있음. 99호실의 무기밀매 수익금은 김정일과 북한 수뇌부에 직접 건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 WSJ는 전·현직 미국 관리 등을 인용해 이들 2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이란과 시리아, 미얀마 등에 대한 무기 밀매에도 관여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엔 제재위원회도 지난 5월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2경제위원회가 핵무기 및 대



량살상무기(WMD) 등의 개발 프로그램에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었음. 이 신문에 따르면 윤호진과 전병호는 그동안 아시아와 유럽, 중동지역에 네트워크를 조성해왔고 자금이동과 밀수를 위해 동남아와 일본, 대만 등에서는 범죄조직과 연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윤호진은 1985년 빈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를 협상했던 주역이고, 2007년 9월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리아 동부 무기시설을 짓는데도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 美NGO, “北에 수해구호품 90t 공수 예정” <VOA>(8/31)

- 미국의 구호단체 ‘사마리탄즈 퍼스’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북한에 내달 초 90t의 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전했다.
- 사마리탄즈 퍼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몇 주간 내린 비로 북한에서 주택과 곡물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전세 화물기편에 구호품을 보내기로 했다”면서 “비행기는 31일 오후 1시(현지 시간)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럿 더글라스 국제공항을 출발해 9월2일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가 보낼 구호품에는 의약품, 수질정화제, 이불, 공구, 임시보호소 건립자재 등이 포함돼 있음.
- 이 단체 회장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80년만의 대홍수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려 있고,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홍수 피해를 본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마리탄즈 퍼스는 2007년 수해 때도 북한에 75t의 구호물품(미화 8백만달러 상당)을 전달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새 행정명령은 투트랙 지속 의미” <美전문가>(8/31)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대북 추가제재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도입한 것은 압박과 외교를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계속 구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미국의 대북 전문가가 진단했음.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 나왔던 행정명령(13466호)에다 이번에 북한의 불법활동을 제재대상에 보탬으로써 미국 행정부는 ‘제재를 포기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최근 일부 언론보도가 잘못됐음을 드러냈다”고 밝혔음.
-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과 각종 공작활동을 주도하는 ‘정찰총국’이 제재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북한 정부차원에서 마약 밀수, 위폐 제조, 돈세탁 등 불법활동에 어느 정도까지 연루됐는지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또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에 북한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의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시리아, 이란, 버마(미얀마) 등 다른 위법국가들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면 대북 추가제재는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음.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번 제재가 북한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 고 말해 중국의 협조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 앨런 롬버그 스티븐슨센터 연구원은 “새로운 대북제재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방지하고, 대화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과거 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부분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롬버그 연구원은 “북한이 앞으로 제재가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은 제재 완화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음.

● <美 새 행정명령 ‘제재효과’는 얼마나>(8/31)

- 미국이 30일(현지시각) 기존의 대북제재에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하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음. 이번 제재대상에는 북한 지도부의 자금관리처로 알려진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산하 대남기구인 정찰총국,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당·군의 핵심기구와 개인이 포함된 것이 특징임.
-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직접 겨냥하고 천안함 사건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국제사회에 알리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임.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정찰총국은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강경한 대남정책을 내고 있는 기관”이라며 “천안함 사건과 연관된 기관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음. 그러나 금융제재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국제사회가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로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계속 시행하는 상황에서 미국 국내법인 행정명령이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 미국은 그동안 추가적인 대북제재에서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음. 이번 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이 자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제재리스트 오른 기관 및 개인과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중론임.
-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밀월관계’를 과시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협조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과거 사례



를 보더라도 중국의 협조가 국제사회의 대북금융제재에 큰 변수로 작용했음. 미국 재무부는 2005년 9월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인 발코델타아시아(BDA)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북한 자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했음. 당시 자금동결로 북한은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이는 마카오의 주권을 가진 중국의 동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임.

- 이에 비해 중국은 지난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했지만 실제로는 사치품 등의 대북수출을 계속하면서 유엔 제재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있는 게 현실임.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미국의 추가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금융제재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정부도 미국 행정명령의 효과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임. 정부 당국자는 “북한을 특정해서 지정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지는 확고해졌지만 실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음.
- 나아가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표가 6자회담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예고한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상징적 효과가 크다”며 “6자회담 재개 흐름이나 한반도 정세에서 심각하게 북한의 발목을 잡는 쪽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음.
- 반면 일각에서는 국제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제재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또 미국이 앞으로 중국에 대북 제재조치에 동참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할 경우 중국이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 美, “수주, 수개월내 추가 대북조치”(8/31)

- 미국 재무부의 스텐턴 레비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30일 추가 대북제재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과 관련, “수주일, 수개월내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음.
- 레비 차관은 이날 새 행정명령 발효와 관련해 재무부에서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담당 조정관과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와 향후 취해질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은 물론 은행들을 기만해 자금을 몰래 움직이고, 전 세계적으로 현금을 밀수하는 등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 레비 차관은 또 “이번 새로운 제재 프로그램이 겨냥하고 있는 활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혹은 기타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한 것들”이라며 “이런 활동에 연루된 북한의 기업과 개인을 지정함으로써 이들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고,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전 세계의 책임있는 기업 및 금융기관들을 돕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음.



- 이어 레비 차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관련된 정보를 전 세계의 민간부문 및 규제책임자들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비 차관은 “북한의 지도부는 국제적인 의무 사항과 책임을 준수함으로써 고립을 종식할 것인지, 점증하는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것인지 택일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
-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제재 담당 조정관도 “우리는 북한이 단순히 회담테이블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는 제재를 없애거나 경감해주는 등의 보상을 할 용의가 없다”면서 “북한은 2005년 9.19합의, 특히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되돌릴 수 없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믿음이 갈만하게 분명한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고 밝혔음.
- 아인혼 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공적으로는 물론 사적으로도 북한에는 ‘긍정적인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며 “북한은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이웃국가들에 대한 호전적 행위를 그만두고, 국제규범을 따르고,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한 불가역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인혼 조정관은 “만일 북한이 그러한 길을 선택한다면, 제재는 해제될 것이고, 에너지 및 기타 경제지원이 제공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는 정상화되고, 현재의 정전협정은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북한에 제공가능한 ‘인센티브’를 설명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그러나 북한이 계속 도전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제재의 강도와 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아인혼 조정관은 “중국은 북한과 합법적인 무역 및 지원, 기타 경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북한이 스스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우리와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는 중국 당국과 이 문제(제재)를 계속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또 아인혼 조정관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피해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명령 발표의 타이밍에 카터 방북이 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美, ‘39호실’-정찰총국 제재 대상 지정”(8/31)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30일(미 동부시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을 새로운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상·하 양원 의장에게 통보했으며, 행정명령은 이날 낮 12시 1분을 기해 (워싱턴 시간) 효력을 발휘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 행정명령 도입의 배경과 관련, “46명의 사망자를 낸 천안함에 대한 기습공격, 2009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치품 조달을 포함해 대북제재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위반행위 등 북한



- 이 미국에 주고 있는 안보위협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 명령은 무기거래 및 돈세탁, 재화 및 화폐 위조, 현금 밀수, 마약 거래 등의 불법 경제활동을 통해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조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 주민과,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 이번 제재의 실무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재무부는 사치품 거래 및 위조·밀수 등 불법 행위의 제재대상과 기준을 설정한 새로운 행정명령과 기존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관련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 추가 제재대상 기업과 개인의 리스트를 발표했다.
 - 새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리스트에는 3개 기관과 1명의 북한 인사가 올랐고, 13382호 제재 대상 추가명단에는 5개 기관과 3명의 인사가 오르는 등 모두 8개 기관, 4명의 개인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새 행정명령 대북 제재 리스트에는 39호실과 정찰총국 외에 북한의 무기 수출업체 청송연합이 포함됐고, 개인으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번 제재는 노동당 39호실을 포함시켜 김정일 위원장의 불법 통치자금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천안함 사건 배후로 지목되는 기관과 인물을 지목함으로써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됨.
 - 청송연합은 지난 2007년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던 조선광업 개발무역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로 천안함 공격 어뢰인 CHT-02D를 수출한 무기수출업체로,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는 재래식 무기 총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다. 김영철은 2006~2007년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을 맡았을 때 “북방한계선(NLL)은 강도가 그은 선”이란 폭언을 했고, 2008년에는 ‘12.1’조치를 통해 남측의 육로출입 제한을 주도한 북한 군부의 대표적 ‘강경파’임. 그는 남파간첩들에게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살해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른 추가 제재대상 기관은 ▲대성무역 ▲흥진무역 ▲제2경제위원회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2자연과학원 등 5개이며, 제재 대상 개인은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등임.
 - 대성무역은 노동당 39호실 산하 기관으로 시리아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흥진무역은 이란의 ‘샤히드 헤마트 인터스트리얼 그룹’에 미사일 관련 물자를 제공하는데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군수공업부는 대포동 2호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개발업무를 감독하는 부서이며, 제2자연과학원은 군수공업부의 지휘를 받아 미사일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곳임.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산을 감독하는 곳임.
 - 제재 대상 개인으로 추가된 윤호진, 리제선, 리홍섭은 현재 유엔 안



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바탕으로 유엔 차원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인물들로, 플루토늄 및 우라늄농축에 의한 핵개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 오바마 “새 행정명령, 北주민은 표적 아니다”(8/3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서명과 함께 발효한 추가 대북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의 목적 및 성격과 관련, “이는 북한 주민과,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행정명령 발동 배경과 관련해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어긴 채 자행되는 북한 정부와 다른 주체의 구체적인 활동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은 무기거래 및 돈세탁, 재화 및 화폐 위조, 현금 밀수, 마약 거래 등의 불법 경제활동을 통해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조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1781호와 1874호는 회원국들이 무기거래 및 사치품 거래 같은 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들 두 가지 대북결의를 이행해 왔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제재)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줬다고 밝혔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은 동부시각으로 2010년 8월 30일 낮 12시1분을 기해 발효된다”면서 “미 행정부의 모든 기관에 대해 행정명령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한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김정일 방중 목적은 권력승계 예고”<EU 前의원>(9/3)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권력승계 계획을 미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글린 포드 전 유럽의회 의원이 3일 밝혔다. ‘북한통’으로 지난달 31일까지 나흘 동안 북한을 방문한 포드 전 의원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견해를 밝힌 뒤 이달 열리는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고위직에 “중요한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음.
- 포드 전 의원은 그러나 “누가 북한의 다음 지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발표도 나올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당 직책을 맡게 될 것이며 추후 정부와 군부에서도 직책을 맡을 수 있다”고 전망했음. 포드 전 의원은 또 북한이 신설



기구를 통해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음. 그는 “지난 6개월여 동안 입수된 모든 메시지는 북한의 내부투자 유치에 관한 것이었다”며 특히 “북한은 투자자들이 새 광산들에 투자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북한이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문제는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은 개혁을 원한다면 내부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음. 포드 전 의원은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법치주의 면에서 안정성을 원하지만 이것이 북한에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고위험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투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북한의 외자유치 추진으로 중국 기업들은 이익을 볼 것이라며 북한 주위에서 기회를 엿보는 중국 기업들이 많다고 전했음.
- 포드 전 의원은 또 북한의 올해 농작물 수확이 흉수 피해 등으로 지난 3~4년 이래 최악의 수준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식량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이같은 현상은 북한 전역에서 나타나기보다는 국지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북동부 도시 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했음.
- 포드 전 의원은 과거에 비해 경기가 위축돼 보이는 평양의 분위기도 전했음. 그는 과거에는 평양 시내 상가에서 4만달러짜리 시계를 팔거나 양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1년 전에 비해 소비가 그리 눈에 띄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화폐개혁이 북한 경제에 미친 타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포드 전 의원의 이번 방북은 그가 속한 싱크탱크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그는 방북 기간 조선노동당 관계자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포드 전 의원은 자신이 북한의 유리공장과 사과 과수원, 북한이 세계 최대라고 주장하는 타조목장도 둘러봤다고 밝혔음.

● <‘속전속결’로 끝난 北 투자 설명회>(9/3)

- 중국 창춘(長春)에서 열리고 있는 제6회 동북무역박람회에 참가한 북한이 3일 투자 환경 설명회를 개최, 비상한 관심을 끌었으나 ‘속전속결’로 끝내 참석자들을 허탈하게 했음.
- 북한은 이날 오후 3시(현지 시각) 박람회가 열리는 창춘 컨벤션센터에서 투자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음. 북한의 경제 상황이나 개발 계획, 방향 등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데다 북한 당국이 해외에서 투자 환경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것이어서 이날 설명회에 외신 기자들과 대북 무역상들의 시선이 집중됐음.
- 그러나 북한은 이날 설명회를 ‘전광석화’처럼 진행, 불과 15분여 만에 끝냈음. 북한 대표인 조 부상의 의례적인 인사말과 지린(吉林)성 대표의 치사에 이어 조중남 무역성 과장이 북한의 경제 상황과 외국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설명에 나섰다. 그는 상속세와 지방세 세율을 낮추는 등 외국 기업에 세계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외자유치 확대



를 위해 합영투자법을 개정했으며 라선을 경제특구로 육성하기 위한 라선특구법을 손질했다고 소개했음. 또 전통적 친선국은 물론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의 합작 확대를 꾀하고 있고 마그네사이트를 비롯한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그의 설명이 속사포처럼 빨라 받아 적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음. 그의 발언 내용이 회의석상 앞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중국어 자막으로 소개됐으나 워낙 빠른 그의 설명에 따라 수시로 화면이 바뀌는 바람에 중국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음. 조 과장의 설명이 끝난 뒤에는 보충 설명은 물론 질의 답변 시간도 없었음. 사전 홍보 자료가 배포되지 않았음은 물론임. 북한은 애초 이날 설명회를 2시간가량 진행할 것이라고 홍보했으나 조 과장의 설명은 5분 남짓했고 조 부상과 지린성 대표의 발언을 합쳐도 이날 설명회 시간은 15분여에 불과했음.
- 베이징에서 왔다는 한 중국 기업인은 “북한 투자를 위해 정책이나 경제 환경 등을 파악하려고 참가했는데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며 “투자 유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행보 빨라진 北-中 경협>(9/3)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방중,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보인 가운데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북한과 중국의 경협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음.
- 구본태 북한 무역성 부상은 2일 중국 창춘(長春)에서 개막한 제6회 동북아 무역박람회에 참석, “라선 특구를 가공 무역과 중계 무역을 전담하는 국제 무역지구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라진항 사용권을 준 데 그치지 않고 훈춘(琿春)-라진으로 연결되는 중국과의 경협 통로를 이용해 라선을 국제 무역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보임.
- 지난해 10월 지린(吉林)성이 북한과의 경협 방안을 공개하면서 라선을 국제무역지구로 개발키로 북한과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외자도 유치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북한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라선시는 이날 창춘에서 훈춘의 중련(中聯)해상운송공사와 합작, 라진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운송선을 운항하는 협약도 체결했음. 이날 협약식에는 리룡시(李龍熙) 연변조선족자치주장과 김수열 라선시장, 배호철 라진항장 등이 양측 지방정부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음. 이로써 라진항을 통해 해상 운송에 나서는 중국 기업은 2008년 라진항 사용권을 확보한 창리(創立)그룹에 이어 2개로 늘었음.
- 중국도 북한과의 경협에 적극적이다. 이샤오준(易小准)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 1일 창춘 무역박람회 식전 행사인 ‘다투먼(大圖們) 제안회의’에서 중국 동북지역 일대를 기반으로 한 ‘초국경 경제협력 지구’ 건설을 제안했음. 동북아시아 5개국이 국경을 초월해 도로와 철도, 항로를 잇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 공동의 경



제적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임. 구체적으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항구를 이용한 동해 진출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제안은 특히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됨.

- 중국은 지난해부터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 개방 선도구’ 건설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궁극적으로 창지투 선도구를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임.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에 가로막힌 두만강 유역이 실질적인 동북아 물류기지가 되려면 바닷길 확보가 우선돼야 함. 라진항에 이어 지난 6월 연변하이화(海華)무역공사가 청진항 사용권을 확보하는 등 중국이 북한의 항구 개척에 큰 공을 들이는 이유도 이 때문임.
- 중국은 연내에 라진항과 청진항을 통한 해상 운송을 본격화 할 계획임. 중국은 단순히 북한의 항구를 통한 뱃길 개척에 머물지 않고 창지투와 라진·청진을 잇는 큰 그림의 북·중 경제벨트 구축도 이미 추진 중임. 청진항 사용권 확보를 계기로 투먼 통상구를 국가 1급 통상구로 승격, 북한과의 무역 확대에 대비하고 있음. 투먼시는 중국과 북한의 변경지역 주민들이 통행증만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무관세 무역을 할 수 있는 호시(互市)무역 시장을 조성, 곧 가동할 계획임. 우선 1만㎡의 규모로 운영하지만 연차적으로 규모를 확대, 100만㎡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고 보세창고와 물류정보센터 등을 갖춘 1.36㎢의 대규모 호시무역 시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임. 북한과 합작, 라선에 국제무역특구를 건설하는 것도 창지투-라진·청진 경제 벨트 구축 차원임.

● “中, 北수해구호에 5만달러 기부”<RFA>(9/3)

-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해 중국 정부가 적십자를 통해 미화 5만달러를 기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전했다. 이 방송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 조사단의 보고서를 인용,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중국이 자국 적십자사를 통해 미화 5만달러와 여러 가지 구호품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달 26일부터 수재민들에게 영양강화 과자를 하루 1인당 250g 씩 제공하고 있다”면서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식수정화제 22만정, 물저장용 젤리 캔 2천780개, 비누 5천700개를 지원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1만명이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세트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RFA는 “수재민들에 대한 유엔 기구들과 국제적십자사의 신속한 지원에 북한 당국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 <中, 김정은 방중 여부에 ‘글썸’>(9/2)

- 중국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시 3남인 김정은이 동행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의 동행 여부를 확인



해 달라는 질문에 “중국 측의 보도에 보면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수행한 주요 인사들의 명단이 있다”며 주요 초청 인사의 명단에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음. 김 위원장의 방중 마지막날인 지난 달 30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측 수행인사는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태종수, 홍석형, 김영일, 김양건 당 부장,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 등이라고 돼 있어 김정은은 포함되지 않았음. 중국 외교부는 전날 연합뉴스가 보낸 별도의 질문지에 대해서도 “주관 부처에 문의하라”고 답변을 회피했음.

-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주관 부처는 지난달 30일 김정은의 수행 여부와 관련, “중국측 (초청) 명단에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음. 중국 당과 정부의 공식 입장은 김정은이 주요인사 초청명단에 없다는 것이지만 중국 당국은 한번도 그가 방중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음. 한 소식통은 “중국의 태도를 뒤집어 보면 김정은이 10여명의 주요인사 명단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서 “그가 방중 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관측했음.
-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약 3개월여만에 전격방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창춘(長春)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4박 5일간 지린(吉林), 하얼빈(哈爾濱), 무단장(牡丹江) 등 동북3성 곳곳을 방문했음. 장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는 상호 방문의 전통이 있으며 양국은 양자관계와 공통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북중 관계의 발전을 추진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음.

● “김정일 ‘후계승인 방중’ 분석은 난센스”(9/2)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최근 방중이 3남 정은으로의 후계 승계를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음. ‘중국의 몰락’의 저자인 고든 G. 창 변호사는 1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김정은 후계 문제에 방점을 찍은 분석이 ‘피상적인 논리’라고 비판했음.
- 창 변호사는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후계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회담의 초점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음. 독립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김 위원장이 노골적인 방식으로 후계 문제에 관해 중국의 동의를 요청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임. 만약 김 위원장이 후계승인을 부탁해야 하는 처지였다면 그가 후 주석에게로 달려갔어야 정상일 터인데 이번 회담이 이례적으로 베이징이 아닌 창춘에서 열려 후 주석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것도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창 변호사의 지적임. 창 변호사는 “중국과 북한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김 위원장의 진짜 방중 목적을 알 수 없다”며 “아마도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북한이 뭔가 나쁜 짓을 하려다 중국에게 들켰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음.

- 한편 창 변호사는 억류 중이던 아이잘론 말리 곱즈를 데려오기 위해 방북했지만 김 위원장을 접견하지 못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외교적 수모’를 당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았음. 카터 전 대통령이 곱즈를 귀환시키는 기본 임무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북한은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과 빌 리처드슨 뉴 멕시코 주지사를 거부하고 카터를 찍어 초청했는데 굳이 외교적 수모를 줄 것이라면 현 당국자를 고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임.

● 北라진, 中과 해상운송 협약 체결(9/2)

- 북한 라선특별시가 2일 중국 훈춘(琿春)의 해운업체와 해상 운송 합작 협약을 체결했음. 훈춘중련(中聯)해운공사와 라선시, 라진항, 라선대외운수회사는 이날 오후 제6회 동북아무역박람회가 열리는 중국 창춘(長春)에서 만나 라진항에서 컨테이너 운송선을 공동 운항기로 합의, 협약서에 서명했음. 중련과 라선은 우선 라진-칭다오(靑島)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을 운항기로 했으며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면 한국과 일본 운항 노선도 개척할 계획임. 훈춘중련해운공사는 1998년 라진에 자회사를 설립, 라선시와 공동으로 4척의 화물선을 이용해 북한 내 해상 운송 사업을 펼쳐왔으며 지난 5월 훈춘시로부터 훈춘-라진 통로를 이용한 해상 운송 사업을 승인받았음.
- 중련은 라선시와 합작해 중국 동북지역의 물류를 북한 내 도로와 철로를 이용, 라진으로 수송한 뒤 해상 항로를 통해 중국 남방이나 해외로 운송할 계획임. 중련 관계자는 “금년 내에 라진항에서 출발하는 해상 항로가 개통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날 협약식에는 리룡시(李龍熙) 연변조선족자치주장과 김수열 라선시장, 배호철 라진항장 등이 참석했음. 중련이 라진항 해상 항로를 개척함에 따라 라진항을 기점으로 하는 해상 항로를 운항하는 중국 기업은 2개로 늘게 됐음. 중련에 앞서 다롄(大連)의 기업 창리(創立)가 2008년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 곧 운항에 나설 예정임.

● “라선 국제가공무역구로 개발” <北당국자>(9/2)

- 구본태 북한 무역성 부상(副相)은 2일 “라선을 국제 가공무역지구로 육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음. 이날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개막한 제6회 창춘국제무역박람회에 참석한 구 부상은 ‘동북아경제무역합작 고위층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이미 라선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했으며 이 특구를 국제적인 가공·중계 무역 지구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소개했음.



- 구 부상은 이어 “이를 위해 행정적, 법률적 조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라진항을 포함한 라선시 개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음을 시사했음. 그러면서 “라선 특구 개발을 위한 발걸음을 적극적이고도 신속하게 내 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의 경제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 공동 번영을 이루려면 개발도상국 간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혀 중국과의 경제 협에 의욕을 보였음.
- 구 부상의 이런 발언은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한 직후 나온 북한 고위 인사의 첫 공식 발언으로, 중국과의 경제 협을 통해 라선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됨.
- 구 부상은 “미국의 부책임하고 투기적인 금융관리가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거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진행하는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과 전쟁 위협으로 동북아시아가 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국가 간 경제 발전과 합작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하기도 했음. 이날 개막한 창춘 동북아무역박람회는 왕강(王剛) 중국 정협부주석을 비롯한 국내외 정·관·경제계 인사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일까지 계속됨. 포스코 정준양 회장을 비롯해 한국의 자치단체장과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북한도 구 부상이 이끄는 80여 명 규모의 방문단을 파견했음.

● “金 중국방문은 불안정성 임박 신호” <英신문>(9/1)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중국 방문은 전례 없는 불안정성(그리고 기회)이 곧 시작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1일 풀이했음.
- 더 타임스는 도쿄발 분석기사에서 “김정일 부자의 중국 방문이 많은 가십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분석가들이 그의 방중 일정에서 동기 등을 가려내려고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들은 왜 김정일이 이처럼 특별한 방문을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김일성이 소년 시절 다녔던 학교를 김정일과 함께 방문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여행은 김정일과 북한이 최종 단계로 들어가고 있으며 전례 없는 불안정성(그리고 기회)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또 다른 신호라는 해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이 이미 올해 중국을 방문했었다는 사실은 최근 방문이 갑작스런 비상 사태 때문에 촉발됐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임. 이 신문은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승계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뇌졸중을 겪은 이후 북한 당국은 신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김정일은 권력을 승계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기 위한 길을 닦아오는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고 해석했음.
- 더 타임스는 “선조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것은 김정일 가족의



개인 이상화에 있어 중심 요소”라며 “김정은이 북한 대중들 앞에 서게 될 때 할아버지인 김일성에 대한 깊은 사랑은 후계자의 자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신문은 “다음 달 예정된 노동당 회의가 개최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지 모른다”면서 “위성이 김정일의 기차가 중국으로 오가는 것은 내려다봤지만 북한 엘리트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첩보 장비는 아직 없고 그 사이를 정보기관들의 추측이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北김영남 “중국군과 협력 강화할 것”(9/1)

- 북한의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일 “북한은 앞으로 중국과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공고하게 발전시키고 북중 양국군의 우호협력관계 강화에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남은 평양발로 보도했다.
-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선양(瀋陽)군구 사령관인 장요우샤(張又俠) 중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상임위원장이 중국과의 군사 분야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최근 한미 양국의 동·서해 합동 군사훈련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김 상임위원장은 “북중 양국은 최고 지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혁명 1세대들의 노력으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더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 중장은 김 상임위원장에 중국 지도부의 인사를 전한 뒤 중국도 양국 우호관계 강화를 희망한다면서 선양군구는 양국의 군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박재경 인민군 대장이 배석했다. 선양군구 대표단은 지난달 25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같은 달 31일 김영춘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을 만났다.

● “김정일, 권력승계 중국 지지 확보 노력”<WP>(8/31)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양국의 국영 매체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서방 언론들은 김 위원장이 권력 승계에 관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 북한이 친애하는 지도자의 ‘그리 비밀스럽지 않은(not-so-secret)’ 방중을 확인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중국 고관들과 환담하고, 산업시설을 시찰했으며, 부친인 고 김일성 주석의 유적지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 포스트는 공개된 대표단 명단에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들어 있지 않지만, 김 위원장의 애국적이고 전략적인 이번 여행을 통해 북한 정권이 권력 승계를 준비 중이라는 신호는 여러 곳에서 포착됐다고 논평했다. 폭스뉴스도 좀체 외국여행을 하지 않는 김 위원장이 불과 4개월 만에 중국을 다시 찾은 것은 전에 없이 시급한 목적 때문



이라면서, 특히 권력승계가 이번 방중의 핵심 이슈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곁들였음.

-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인홍(時殷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목적은 권력 승계와 관련해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그의 핵심 관심사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방중 기간 한국 언론은 김 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을 중국에 소개할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타임스는 특히 평양방송이 공개한 방중 대표단 명단에 김정은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김 위원장이 후주석과 회담 중 후계 문제를 언급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소개하며 관심을 보였다. 또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을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북중 대결구도와 연계해 분석한 사례도 있었음.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이 깜짝 회합을 통해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하는 미국 등의 압력에 직면한 양국의 유대 관계를 과시했다고 논평했다. 특히 신문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북한의 고립주의자적 태도에 일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를 낳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고의 정치적 동지이자 경제적 후원자인 중국에 대한 의존성향을 부각시키는 형국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음.

● 中 전문가 “김정은 동행, 후계구도에 방점”(8/31)

- 중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시 삼남인 김정은이 동행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방문의 목적이 후계구도와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평항(鳳凰) TV의 평론가인 뤼닝쓰(呂寧思)는 31일 방송사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아들을 데리고 방중한 것과 베이징을 찾지 않은 것은 현묘한 계책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 김정은의 방중을 기정사실화했음.
- 그는 “올해 두번째 방중에서 김정일은 후계자로 내정된 삼남 김정은을 데리고 왔다”면서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초창자 명단에 없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했지만 실제로 데리고 왔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중은 김 위원장이 새로운 태양(김정은)을 중국 지도자에게 소개하려는 의도가 크다”면서 “역대 방중시 한반도 빠진 적이 없던 베이징을 찾지 않고 지린(吉林)성과 헤이룽장(黑龍江)성의 김일성 주석의 혁명성지를 찾은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이번 방중은 아들에게 혁명전통 교육을 시키면서 김씨 일가의 오늘은 각고의 노력과 피의 희생을 통해 얻은 것이란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면서 “베이징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베이징, 상하이, 홍콩, 마카오 등 대도시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큰형(김정남)처럼 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한 것”이라고 분석했음.
- 유명 시사평론가이자 전문 블로거인 덩둥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북한 측 수행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내달 초순 44년만에 열리는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후계자 문제를 논의하는 핵심 인사 들임을 알 수 있다며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 그는 “김정은이 중국 관영(CC)TV 화면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첫째로 보안상의 문제이거나 두번째로 보도에 나올 만큼 직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음. 그는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지 않은 것은 서방 등 외부에 세자 책봉을 하러 왔다는 인상을 풍기지 않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도 했음.

- 덩둥은 그러면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도 상당한 함의가 있다고 분석했음. 그는 관례대로라면 후 주석은 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해 외국 지도자를 환영한다고 했어야 했지만 이번 방중이 당 차원의 교류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북한 측의 요구를 중국 측이 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분석함. 이 역시 후계구도 문제와 연관지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임.
- 실제로 베이징의 외교가에서는 김정은이 초청자 명단에 없었다는 중국 측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김정은이 아버지를 따라 방중한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에서 김 위원장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직접적인 화법으로 긍정 평가한 데에도 의미를 부여했음. 덩둥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정확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라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려는 후 주석의 제안에 완전히 동의한다고 말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음.
-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이 한미의 군사위협을 타개해 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옴. 시사평론가이자 유명 블로거인 류위민(劉毓民)은 시나닷컴에 올린 글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중 양국의 우의에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를 한국과 미국에 강하게 전달했다”면서 “한미의 군사위협을 돌파하고 정권을 안정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분석함.

● 中매체, “韓美日, 北 더 괴롭히면 안돼”(8/31)

-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그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31일 노골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공동사설을 싣고 한미일에 대해 더 이상 북한을 괴롭히지 말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세계는 응당 북한의 개혁·개방을 격려해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사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5일간의 중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 나와 주목을 끌었고 이 사설에선 한일과 미국을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감지됐음. 사설은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방중을 개방에 대한 관심표명으로 평가하고 “김 위원장은 최근 3개월 사이에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부흥하고 있는 중국 시장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찾았다”며 “이는 북한이 개방과 경제 발전에 큰 관심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 또 “중국의 경제 발전은 북한의 강 건너편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 “북한의 지도자가 중국으로부터 배우기를 꺼릴 이유는 없다”며 “김정일의 최근 (중국) 방문은 경제에 대한 그의 관심이 증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사설은 “외부 세계는 북한이 문호를 스스로 차단했다고 불평하지만 한미동맹의 존재, 한국·미국·일본의 매체들이 북한 정권을 어떻게 전복시킬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해왔다는 사실 등을 감안해 북한의 입장에 처한다면 달리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 사설은 이어 “서방은 항상 북한을 세계의 주된 위협 중 하나로 간주하지만 어떻게 북한 같은 나라가 그들에게 ‘자살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북한은 한·미·일의 그늘 속에 살면서 군사적 위협과 정치·문화적 침투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폐쇄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역설했다. 사설은 또 “북한의 개방은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풀기 어려운 울매듭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당사국들도 매듭을 풀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세 나라(한·미·일)는 북한을 더 이상 괴롭혀선 안된다”면서 “중국은 국제적인 혼란에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그들의 역할을 재고(再考)해야 한다”면서 “그들은 정말로 미국에 의해 더 단단히 조여진 울가미 속에 갇히고 싶은가”라고 반문했다.
- 한편 사설은 김 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공식 등극한 1998년 이후 베트남을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으며, 1998년 이전 기록에서도 베트남 방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환구시보는 인민일보의 국제판 격으로 국제문제에 대해 인민일보가 하기 어려운 국제문제에 대해 때로는 도가 지나친 논조의 기사를 게재한다는 평가임. 또 작년 4월부터 발행된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해외 주류 매체들에 대해, 국제 현안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알리기 위해 설립한 매체여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꺼려하는 중국 정부의 속내를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김정일訪中> 4박5일 방문 뭘 남겼나(8/30)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30일 저녁 투먼(圖門)에서 남양으로 귀국함에 따라 4박5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됐다.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여만의 ‘깜짝 방문’인데다 철통 보안으로 점철된 탓에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그 배경에서 동선, 그리고 행적 모두 내내 베일에 가려졌으나 방중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적인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던 듯 함.



- 김 위원장의 방중은 ‘미묘한’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합의가 적지 않아 보임. 특히 천안함 사태 발생 후 원인규명을 놓고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 대립구도가 5개월여 진행돼 오다가 근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과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북, 그리고 그에 이은 6자회담 관련국 순방으로 대화 재개 노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정상회담이 이뤄진 점이 주목됐음.
- 우선 방중 기간 내내 ‘합구’하던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예전처럼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김 위원장의 방중 기사를 쏟아내면서 북중 양국 정상의 북핵 6자회담 재개 노력에 방점을 찍었음. 이 통신은 지난 27일 창춘(長春)의 난후(南湖)호텔에서의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하면서 “중국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한다”는 김 위원장의 언급을 전했다. 아울러 후 주석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장성명을 발표한 후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동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의 기치를 들고 현재의 긴장 국면을 완화하기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맞장구쳤다. 북중 정상은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교착상태인 북핵 6자회담 재개에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임.
- 김 위원장이 미국 등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전된’ 조치 요구에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으로 북핵 6자회담 재개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김 위원장의 이런 제스처는 지지부진한 6자회담의 회생을 위해 노력해온 중국의 체면을 살렸다는 지적도 있음.
-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런 파격을 보임으로써 반대급부로 다른 무엇을 챙겼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다음 달 초순 노동당대표자대회에서 김 위원장의 3남인 정은으로의 후계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6자회담과 관련한 양보로 후계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인 동의와 경제적 지원을 얻었다는 해석임.
-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세습 의도를 노골화한 김 위원장의 방중 행보이고 이를 묵인한 중국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음. 김 위원장은 지린-창춘-하얼빈-무단장을 잇는 4박5일의 여정에서 북중정상회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김 주석의 모교와 혁명유적지를 찾아 혁명 계승의지를 다지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북중정상회담에서도 후계 문제에 관한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추정됨. 이에 대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암묵적인 동의를 했을 것이라는 대체적인 추정임.
- 특히 지난 5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 주석은 “양국간 전통적 우의관계가 세대교체로 인해 변화가 생겨서는 안된다” “양국 우호관계를 대대손손 계승하는 것은 공통된 역사의 책임”이라고 말해 김정은 후계체제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한 점으로 미뤄 후 주석이 이번에도



그런 정도 수준에서 언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북중 양국이 어떤 수준의 경제협력에 약속했는지와 중국이 어느 정도의 경제원조 약속을 했느냐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된데다 근래 홍수 등 자연재해로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일정 수준에서 중국의 대북원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중국이 대북 원조에 대해서는 극비로 삼는 탓에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함.
- 아울러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지린, 창춘, 하얼빈 등의 동북3성에 집중됐던 탓에 현재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창·지·투(長吉圖) 개발 계획’과 관련해 북중 양국간 논의에 큰 진전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중국 정부는 창지투 계획의 성공을 위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해출항권’을 달라고 북한을 집요하게 설득해왔으며 이번에 김 위원장의 방중 동선은 그런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임. 따라서 지난 2008년 중국 다롄(大連)의 창리(創立)그룹에 라진항 1호 부두에 대해 10년 사용권을 내준 북한이 중국에 추가적인 ‘허가’를 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 김 위원장이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한 점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대목임. 개혁개방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자력갱생과 대외협력의 공존 필요성을 강조한 후 주석의 설명에 김 위원장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빠른 발전을 이룩했고 어느 곳이든 생기가 넘친다” 고 말한 대목은 향후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김정일, “북중친선 바통 후대에 잘 넘겨야”(8/30)

- 지난 26~30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마련한 환영 연회에서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 조중(북중)친선의 바통을 후대들에게 잘 넘겨주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 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7일 창춘(長春)시 난후(南湖)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만찬 연설을 통해 “대를 이어 조중 친선을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은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후계구도에 대해 중국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됨.
- 김 위원장은 또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조중 친선은 역사의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친선으로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 면서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조선 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와 결심을 다시금 천명한다” 고 밝힌 것으로 중앙통신이 말했다. 후 주석은 이에 대해 “중조 친선을 시대와 더불어 전진시키고 대를 이어 전해가는 것은 쌍방의 역사적 책임이며, 중



- 조 친선협조 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 이라면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중조친선 협조관계를 진정으로 수호하며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 고 화답했음.
- 후 주석은 지난 5월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우호 관계를 시대의 흐름과 함께 발전시키고 대대손손 계승하는 것은 양국이 가진 공통된 역사의 책임” 이라고 밝힌 바 있어, 김정은 후계 구도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지를 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임.
 - 그러나 중앙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의 다른 의제들과 관련,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고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만 밝힌 채 더 이상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음.
 - 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후 8시를 기해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일제히 전하면서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태종수 당 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장성택.홍석형.김영일.김양건 당 부장,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가 동행했다고 소개했음. 그러나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이 동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 중앙통신은 이번 방중에서 김 위원장이 지린(吉林)시를 방문해 위원중학교, 베이산공원, 지린화학섬유그룹, 지린가톨릭교회당을 둘러봤으며, 이어 창춘(長春)시에서는 창춘농업박람회와 장춘궤도객차공사를, 하얼빈(哈爾濱)시에서는 하얼빈해강식품공사와 하얼빈전기그룹 등을 참관했다고 전한 뒤 특히 지린시의 위원중학교와 베이산공원이 고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김정일訪中> 中 접견 인물은 누굴까(8/30)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5일간의 이번 방중기간 지난 27일 창춘(長春)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외에 중국측 인사들을 다수 접견했음.
- 신화통신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김 위원장-후주석간의 정상회담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과 만난 중국 인사로 실명을 거론한 고위직은 후 주석의 비서실장격인 당 중앙판공청 링지화(令計劃) 주임과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두 명 뿐임. 이로 미뤄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을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김 위원장의 지난 5월 방중때 첫 방문지인 다롄(大連)에서 리커창(李克強) 상무 부총리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세대 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 부주석이 영접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었음. 그러나 관영 CCTV가 보도한 북-중 정상회담 화면에는 중국측 참석자로 링지화 주임과 다이빙귀 국무위원 이외에 양제츠 외교부장, 왕자



루이(王家瑞)공산당대외연락부장, 장핑(張平) 국가발전계획위 주임, 천더밍(陳德銘)상무부장,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중국대사, 류제이(劉結一)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등의 모습이 비쳤음.

- 이밖에 김 위원장이 방문한 지린(吉林)성에선 쑨정차이(孫政才) 서기와 왕루린(王儒林) 성장이 그를 마중나왔거나 영접했고 헤이룽장(黑龍江)에선 지빙쉬안(吉炳軒)서기와 왕셴쿠이(王憲魁) 신임 대리 성장이 접견했을 것이 확실시됨. 또 김 위원장이 첫 방문지인 지안(集安)에 도착했을 당시 류즈권(劉志軍) 철도부장이 마중나왔을 공산이 큼.

● “김정일, 투먼-남양 구간 통해 귀국”(8/30)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전용 특별열차 편으로 30일 오후 6시 25분 (한국시간 오후 7시 25분)께 투먼(圖們)에 도착해 20분 후인 오후 6시 45분께 북한의 남양으로 건너갔음. 김 위원장은 이로써 4박5일 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음. 김 위원장은 지난 다섯차례 방문에서 모두 신의주-단둥(丹東) 구간을 이용했으며 이번처럼 오갈 때 만포-지안(集安)구간과 투먼-남양 구간을 이용한 것은 이례적임.
- 특별열차가 떠나면서 투먼 일대의 교통통제는 해소됐으며 역 부근의 경찰 경계병력도 이날 오후 7시께 철수했음. 김 위원장은 남양에서 마중나온 북한 인사들로부터 간단한 환영인사를 받고서 특별열차 편으로 평양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음.
-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하얼빈(哈爾濱)역을 떠나 5시간여 만인 낮 1시 45분께 무단장 역에 도착해 의전차량으로 갈아탄 뒤 동북항일연군(聯軍) 기념탑이 있는 베이산(北山)공원을 찾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장은 조선과 중국의 공산당이 항일 공동투쟁을 위해 결성한 동북항일연군이 1930년대 활동했던 주무대로 선친인 김일성 주석을 비롯해 최현, 서철, 오백룡, 임춘추, 안길, 최용건, 김책 등 북한 정권 수립의 주역들이 모두 동북항일연군 1로군 소속이었음.
- 김 위원장은 방중 첫날인 26일 김 주석의 모교인 지린(吉林) 위원(毓文)중학교, 29일에는 하얼빈 타이양다오(太陽島)의 동북항일연군 기념관, 그리고 이번에는 무단장의 항일유적지를 방문함으로써 이번 방중이 ‘성지순례’에 무게를 뒀음을 보여줬음. 특히 김 위원장은 선친의 항일유적지 방문을 통해 혁명정신 계승 의지를 보이려 했다는 지적임.
-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관심의 초점이 된 김 위원장의 3남 정은은 중국측 (초청)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 고 말했음. 그러나 초청 명단에 없다는 게 실제 김정은이 중국을 방중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中, 창춘서 북중정상회담 개최 확인”(8/30)

- 베이징의 유력 외교소식통은 3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창춘(長春)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중국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음.
- 김 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창춘의 난후(南湖)호텔로 진입해 그 다음날 오전 외출을 위해 호텔을 나서기까지 머물렀음. 후 주석은 김 위원장보다 먼저 난후호텔에 도착했으며 이날 오후 시간대에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에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동선이 창춘(長春)-지린-하얼빈 등으로,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창·지·투(長吉圖)계획’의 주요 지역과 겹친 점으로 미뤄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한 북중 협력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창지투 계획의 성공을 위해 그간 요청해왔던 ‘동해출항권’에 대해 북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주목됨. 북한은 지난 2008년 중국 다롄(大連)의 창리(創立)그룹에 라진항 1호 부두에 대해 10년 사용권을 준 바 있으나 중국 측은 그동안 북한 측에 이미 확보한 1호부두의 사용기간 연장과 그 외의 다른 부두 사용권을 요청해왔음.
-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3남 정은으로의 후계를 공식화할 다음달 초순 노동당대표자대회를 앞두고 중국의 정치적인 동의와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이 이번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체면을 살릴 ‘진전된’ 양보를 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내놓고 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후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고서 당일에 난후호텔에서 숙박을 할 정도로 김 위원장과 장시간 머물러 견고한 북중 연대를 과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음.
- 이 소식통은 또 “관심의 초점이 된 김 위원장의 3남 정은은 중국측(초청)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청명단에 없다는 게 실제 김정일이 중국을 방중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그런 반면 다음 달 초순으로 예정된 노동당대표자 대회에서의 권력승계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위해 정은을 동행하지 않았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 中 “김정은, 초청명단에 없다”(8/30)

-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지난 27일 창춘(長春)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개최됐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대외연락부가 오늘 오후에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대외연락부는 아울러 이번 김 위원장의 3남 정은의 수행여부와 관련해 “중국측(초청) 명단에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음.



● <김정일訪中> 무단장서 선친 유적지 방문(8/30)

- 30일 오전 하얼빈(哈爾濱)을 출발, 귀국길에 오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투먼(圖們)으로 향하던 도중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牧丹江)에 들러 선친인 김일성 주석의 항일 유적지를 방문했음. 무단장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하얼빈을 출발한 지 5시간여 만인 이날 낮 1시 45분께 무단장 역에 도착, 의전 차량으로 갈아 탄 뒤 동북항일연군(聯軍) 기념탑이 있는 베이산(北山)공원을 찾아 참배했음.
- 김 위원장 일행은 기념탑 참배를 마친 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다시 특별 열차에 올라 투먼 방향으로 향했음. 김 위원장의 특별 열차 도착에 앞서 무단장 역 주변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경찰 통제가 시작됐으며 오후 1시 30분께 무단장에서 베이산공원 구간 도로 접근이 완전 차단됐음. 무단장은 조선과 중국의 공산당이 항일 공동투쟁을 위해 결성한 무장 투쟁 세력인 동북항일연군이 1930년대 활동했던 주무대임.
- 김 주석을 비롯해 최현, 서철, 오백룡, 임춘추, 안길, 최용건, 김책 등 북한 정권 수립의 주역들이 모두 동북항일연군 1로군 소속이었음. 헤이룽장 조선민족출판사는 1997년 김 주석의 무단장에서의 활동을 소개한 137쪽 짜리 ‘김일성의 목단강 시절’이라는 책 2천부를 한정 발행하기도 했음. 김 위원장은 방중 첫 날인 지난 26일 지린(吉林) 위윈(毓文)중학교를 찾은 데 이어 지난 29일에는 하얼빈 타이양다오(太陽島)의 동북항일연군 기념관을 방문하는 등 방중 기간 선친의 항일 유적지를 순례했음.

라. 일·북 관계

● “김정일, 5월 방중때 승계 언급”<교도>(8/31)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5월 방중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노동당이 자신의 삼남 정은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북중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31일 전했다.
- 소식통은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한 회담에서 자국 상황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며 김 위원장은 예정된 계획에 따라 승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북한 매체 모두 지난 5월 3~7일 김 위원장 방중 당시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보도하면서 승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음. 교도통신은 지난 27일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승계 계획에 대한 중국의 승인과 지지를 받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日紙, 김 방중 관련 “北 분수령 접근” 사실>(8/31)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결과를 두고 일본 유력지인 아사히신문이 31일 “북한이 분수령에 접근하고 있다”는 제목의 사실을 실어 눈길을 끌었음. 아사히신문은 이 사실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의 건강 불안 탓에 3남 김정은에게 권력 세습을 서두르는 와중에 이번 방중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같은 표현을 사용했음. 갑작스런 비공개 방중이 북한이 처한 위기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한 것임.
- 신문은 또 “(북한이) 국내에서 엄격하게 사상 통제를 하는 와중에 후계 체제 구축을 나름대로 진전시키겠지만, 살아남기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며 “일·미·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해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이같은 과제를 타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 또다른 유력지인 요미우리신문은 “6자회담 재개로 연결될까”라는 제목의 사실에서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에 6자회담 조기 재개 희망을 피력했다는 점에 주목했음.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아사히신문과 마찬가지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담았음.
- 요미우리신문은 사실에서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현상이야말로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근본적 원인”이라며 “중국의 책무는 김 위원장에게 ‘핵보유와 경제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후주석이 9월에 열리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의 성공을 기원했다’는 신화통신 보도를 근거로 “중국이 북한의 3대 세습을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음.

● 日, “조총련계 고교에 회계 투명성 요구”(8/31)

- 일본 정부가 조총련계 고교를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할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회계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음. 문부과학성은 31일 고교 무상화 정책을 조선학교에 적용할지 검토해온 전문가회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던 방침을 바꿔 민주당과의 협의 이후로 결론을 미룬 뒤 논의 기준만 공개하는데 그친 것임.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학교측이 학생 대신 받게 될 취학지원금(무상교육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쓰지 말고 수업료에 충당하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제시했음. 또 교직원 편성 등 13가지 항목은 3년마다, 재무제표는 매년 문부과학성에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허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경고했음. 이는 ‘조총련이 돈을 받아 북한에 보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 전문가들은 또 보고서에서 체육·예술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전문교원이 필요한 교육을 하고, 전수(專修)학교 고교 과정(상업·공업·농업고교에 해당) 수준의 토지와 교사(敎舍), 설비를 갖추고 있으면 일본의 다른 고교와 비슷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고 무상교육 대상



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고, 사상교육 등 교육 내용을 문제 삼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음. 기준에 따르면 조선학교는 결국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됨. 문부과학성은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라”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지시에 따라 최종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며 “당과의 논의도 이번 보고서를 기초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 기 타

● “김정일, 언론 잘 따돌리는 심한 장난꾼” <佛紙>(8/30)

-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가 3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일행이 최근 중국 방문 과정에서 세계 유수의 언론들을 따돌리는 솜씨를 소개하는 이색 기사를 게재했음.
- 르 피가로는 이날 ‘김정일과 그의 후계자, 중국에서 세계 언론과 숨바꼭질’이라는 제하의 1면 상자 기사를 통해 지난 26일부터 의문의 중국 방문을 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세계 언론들을 유유히 따돌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을 “선글라스 뒤에 숨어 있는 심한 장난꾼” 이라고 비유했음.
- 신문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국제사회에 도전한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김 위원장은 숨바꼭질에 아주 능하다” 면서 인터넷과 실시간 정보시대에 북한의 ‘경애하는 지도자’는 언제나 추격자들보다 한 발짝 앞서 간다고 말했음.
- 르 피가로는 김 위원장이 부친 김일성 주석이 공부했던 지린(吉林)시의 한 학교를 순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자들이 그의 특별열차를 찾아 기차역으로 갔으나 운이 없게도 ‘21세기의 태양’인 김 위원장은 승용차를 선택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비밀약속이 돼 있는 창춘(長春)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말했음. 또 지난 28일 밤에는 김 위원장의 열차가 ‘은둔의 왕국’으로 향하는 것이 목격됐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다음날인 29일 아침 북한의 어떤 국경 초소에서 그 열차가 지나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마치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면서 김 위원장은 다시 한번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알려지지 않은 행선지를 향해 중국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 르 피가로는 지난 28일에도 김 위원장과 김정일의 돌연한 중국 방문은 중국으로부터 후계자를 승인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었음.

● “北, 동유럽국에 채무 탕감 요청 잇따라”(8/19)

-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이 동구권 국가들에 진 빚을 갚지 못해 탕감과 현물 상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동구권 국가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음.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9일 ‘헝가리, 북한의



채무 탕감 요청 공개(Hungary reveals North Korean debt request)' 라는 제목의 오스트리아 빈 발 기사에서 헝가리 경제 부처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채무 90% 이상을 탕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북한 협상팀이 2008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협상에서 경제난을 감안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채무 탕감안을 처음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헝가리 정부는 일부를 탕감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북한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북한의 헝가리 채무는 2천960만 루블이며, 대부분 ‘철의 장막’이 무너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헝가리 정부 관리가 설명했다. 이 관리의 “세부적인 탕감 규모 등은 추후 확정해야 할 사안인데 언제 협상이 재개될지는 밝힐 수 없으며 인삼(人蔘)으로 갚는 방안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거론된 바 없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체코에도 1천만 달러에 이르는 채무의 95% 이상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나머지 5%는 인삼으로 상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체코 재무차관이 밝힌 바 있음.
- FT는 “북한은 빈사상태의 국내 경제와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무역제재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음. 이 신문은 지난 3월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와 돈세탁, 마약밀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현재 대외 채무는 12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3분의2는 전 공산주의 국가들에 집중돼 있다”고 덧붙였다.

● “이란 대통령, 대북한 협력관계 무한지속”(8/18)

-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지난 17일 조인철 이란 주재 신임 북한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란과 북한 간 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며 양국 협력 관계 증진에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18일 대통령실 웹사이트를 인용, 보도했음.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최근 경색 국면을 보이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남북 당국이 적들(서방)의 음모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음. 그는 미국 정치인들이 도발적인 행동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남북한 당국이 남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강대국들이 국가 간 긴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며 현재 거만한 권력에 맞선 저항은 미래 세계에 평화와 안정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과 이란은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탄도미사일방어 계획 검토보고서에서 “이란은 북한과 미사일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 완성할 경우 해당 기술이나 시스템이 이란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그러나 핵 또는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북한과 어떤 협력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음.

● 폴란드, “北 유엔제재 위반 포착시 즉각 조사”(8/17)

- 북한의 해외계좌가 개설돼 있는 유럽 국가 중 하나로 알려진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 내에서 유엔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불법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했다.
- 폴란드 외무부의 피오트르 파스코브스키 대변인은 RFA에 “북한의 불법 외화 송금 의혹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폴란드 내에서 북한의 불법행위가 이뤄지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안이어서 관계 당국이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온전히 지지하고 규정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폴란드 내에서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이나 기관의 어떤 혐의라도 포착되면 당국이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RFA에 따르면 폴란드의 ‘Kredyt’은행은 지난해 발표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의 ‘유엔 제재 1874호 관련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의 ‘연합개발은행’이 직접 거래하는 21개 외국 은행 중 하나로 지목됐음. 또 최근 나온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폴란드는 북한의 해외 계좌가 있는 8개 유럽국가에 포함됐음.
- 한편 ‘Kredyt’은행이 속한 폴란드 KBC그룹의 이사벨라 트오질로 대변인은 RFA에 “우리 은행은 1990년 창립 이후 북한과 어떠한 경제 교류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국제적 기준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가 유엔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덕수대사 “美서부도 한미FTA에 우호적”(9/4)

- 한덕수 주미대사는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서부지역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홍보활동을 마친 후 “무역의존도가 높은 미국 서부지역의 분위기도 한미 FTA 비준에 아주 우호적이었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이날 로스앤젤레스(LA)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 상



공인들 뿐 아니라 보잉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서부의 주요 기업들과 영화업계에서도 한미 FTA의 비준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한 대사는 지난달 31일 워싱턴 주의 시애틀과 타코마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새크라멘토와 LA 등지에서 지역 상공인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FTA의 비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지난 2일 오후 한 대사는 이틀간 미국영화협회(MPAA) 포럼과 캘리포니아 주 상공회의소 이사회 만찬포럼, 캘리포니아 국제무역회의소 조찬포럼 등에 잇달아 참석해 한미 FTA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주미대사관은 그동안 지난 3월 말부터 앨라배마 주와 뉴욕 주, 메릴랜드 주, 텍사스 주, 오키오 주, 일리노이 주, 미시간 주 등 미 전역을 돌며 ‘한미 FTA 아웃리치’ 활동을 벌여왔다. 한 대사는 “미 전역을 돌며 지금까지 아웃 리치 행사를 진행해온 결과 자동차 업계가 한미 FTA 타결 내용에 불만을 나타냈을 뿐 다른 업계는 비준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면서 “특히 쇠고기업계도 ‘이 정도 내용이면 됐다’는 기류가 있었다”고 전했다.

● “한국, M1 소총 86만정 美수출 논란”(종합) (9/3)

- 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M1 소총 86만정을 미국에 판매하려는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2일 보도했다.
- 케이블 뉴스채널인 폭스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방비 확보 차원에서 6.25전쟁 때 사용됐던 M1 카빈(Carbine) 소총 77만여정과 M1 개런드(Garand) 소총 8만7천여정을 미국내 총기수집상들에게 매각하기를 원했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임. 애초 오바마 행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같은 대규모 총기거래를 승인했으나, 지난 3월 입장을 바꿔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임.
- 일반적으로 제조후 50년이 경과한 M1 소총의 경우 ‘골동품’ 차원에서 수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방하지만, 이번처럼 미국이 한국 정부에 넘겨줬던 총기를 되사들이는 것은 거래성립 전에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범주’에 해당된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M1 소총의 수입을 막고 있는 이유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그처럼 대량의 무기 거래가 있게 될 경우, 불법적 목적으로 화기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실은 “국무부는 한국으로부터 M1 소총을 들여오기로 한 작년 5월 7일의 결정을 올해초 취소했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 및 미 육군과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총기사고 예방단체들은 “대용량 탄창을 장착하는 총들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국무부의 결정을 반기고 있는 반면, 총기



소유 찬성론자들은 “M1 소총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것이며, 특히 이 총은 기관총이 아니라 한발 한발씩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 반자동 소총”이라고 맞서고 있음.

- M1 소총 등 ‘골동품’이 되다시피한 총기의 미국 내 대량 반입문제에 대한 미국 역대 행정부의 처리방식은 사안별로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권인 빌 클린턴 행정부는 필리핀, 터키, 파키스탄으로부터 M1 소총과 기타 ‘엔티크’ 군사무기가 수입되는 것을 막았던 반면,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1987년 한국으로부터 20만정의 M1 소총을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있었음.

● 한미, 5~9일 서해서 연합대잠수함 훈련(종합)(9/3)

- 한국과 미국은 5~9일 서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3일 공동발표했음. 이번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KDX-II) 등 구축함 2척과 호위함 및 초계함 각 1척, 제6항공전단의 P-3C 초계기, 잠수함 등이 참가함.
- 미국은 유도탄 구축함인 커티스 월버함(DDG-54)과 피츠제럴드함(DDG-62), 3천200t급 대양감시함(해양조사선)인 빅토리어스함(T-AGOS 19) 등이 참가하며 빅토리어스함은 광범위한 지역의 해저탐색 능력을 갖추고 있음. 커티스 월버함과 피츠제럴드함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LA급(7천900t급) 고속공격형 잠수함과 제9초계 비행대대(VP-9)의 P-3 오라이온 초계기 등도 참가할 예정임. 제9초계 비행대대는 하와이 카나오헤 미 해병대 기지에 주둔하고 있음. 이번 훈련은 지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상에서 실시한 ‘불굴의 의지’ 훈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연합해상 훈련임.
- 합참 관계자는 “북한에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보내고 총체적인 연합 대잠수함전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상훈련”이라며 “적의 잠수함 침투에 대비한 전술과 기술, 대응 절차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병력 1천700여명도 훈련에 참가한다”며 “고난도의 자유공방전훈련과 잠수함 추적 훈련 등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 <미국 20곳에 ‘위안부 기념비’ 건립된다>(9/1)

- 뉴저지주 팰리세이드파크를 비롯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내 한인 밀집지역 20곳에 2년 전 미 하원에서 통과된 ‘일본군 위안부 결의’ 메시지가 담긴 기념비가 들어설 예정임. 뉴욕 한인유권자센터(KAVC)의 김동석(53) 소장은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는 10월 중 뉴저지에 첫 기념비를 세울 계획”이라며 “이는 2007년 미 하원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역사적 책임 등을 요구한 결의의 이행을 촉구해 온 노력의 하나”라고 말했다.



- 김 소장에 따르면 뉴저지 버겐카운티의 팰리세이드파크 시의회는 지난 4월 기념비 건립을 위해 시 도서관 부지를 제공하는 결의를 가결했음. 팰리세이드파크시는 미국에서 한인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임. 버겐카운티 정부도 6천 달러 상당의 화강암을 기증했음. 화강암에 ‘위안부 결의’ 내용을 요약한 동판을 박아 세우는 기념비는 개당 1만5천 달러(1천800만원) 가량임. 동판 제작은 한인 작가 대신 미국 작가에게 의뢰했음.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 내 여론 확산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임.
- KAVC는 미 고교에 재학 중인 한인 인턴 학생들과 함께 기념물 건립을 위한 서명과 모금 운동을 벌인 덕분에 연내 버겐카운티와 뉴욕 플러싱 등 2곳에 기념비가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음. 내년에는 LA 한인타운 2곳을 시작으로 건립지역을 확대, 앞으로 2년간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20개의 기념비를 세울 계획임. 기념비는 지난해 1월 흑인 노예제도나 나치 치하의 유대인 학살인 홀로코스트,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등을 상기시켜주는 기념비가 미국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김 소장은 밝혔음. 김 소장은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결의는 그 상징성이 중요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잊혀진다”며 “반인권적 행위들의 재발을 막고 미국과 세계에 평화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서는 이런 기념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음.
- 김 소장은 “미국사회가 기념비 건립 운동에 대해 한 일간 분쟁 차원이 아닌 인권과 평화 등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고 역사적으로 청산해야 할 과제를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며 “이 운동을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계기로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음.

● 北전문가 놀랜드 박사 “통일세 논의 대환영”(8/30)

-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북한 전문가로 통하는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검토 제안에 대해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재직 중인 놀랜드 박사는 30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통일세를 언급했을 때 좀 놀랐지만 이제 드디어 한국의 대통령이 통일 비용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이 매우 기뻐다”고 말했음.
- 그는 통일 후 10년간 한국에 6천억 달러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한국은 통일에 대비한 보험이라는 생각으로 미래의 통일 지출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 비용 대비를 위해 한국 정부가 일반적인 상황보다 재정을 더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그는 “세금이나 부담금, 기금의 형식은 사실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며 “통일비용을 어떤 형식으로 마련할지는 한국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라 구체적으로 조언하기는



- 어렵다”고 덧붙였다.
-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경제에서 시장의 요소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이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며 “다시 북한에서 시장이 복구되고 있다”고 평가했음. 그는 “화폐개혁 실패로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이 있었고 간헐적으로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고도 있는데, 대규모 소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음.
 - 놀랜드 박사는 특히 현재의 북한 정권을 티토 집권 말기의 구(舊) 유고슬라비아에 빗대어 눈길을 끌었음. 그는 “티토는 매우 강력한 리더였지만 그의 사후 유고슬라비아는 집단지도체제로 바뀌었고 이 시스템이 10년 정도 유지됐다”며 “유고슬라비아처럼 북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늘 밤 죽는다고 해서 즉시 붕괴되지는 않고 집단 리더십 체제가 들어서겠지만 이 체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음.
 -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그는 “북한과 중국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전혀 모르지만 김정일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끌어내는 동시에 후계체제를 승인받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은 북한에 호전적인 행위 중단, 경제개혁, 6자회담 복귀 등을 주문했을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나. 한·중 관계

● 中어선, 서해서 韓화물선과 충돌..전원실종(9/2)

- 중국 어선 한척이 서해상에서 한국 화물어선과 충돌해 침몰하면서 선원 전원이 실종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한국 해양경찰청 통보를 인용, 중국 어선 1척이 1일 오후 2시25분(한국시간)께 충청남도 태안 격렬비열도 서쪽 68해리 해상(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17해리 밖)에서 한국 HC해운 소속 1천250t급 화물선과 충돌했다고 밝혔음. 이 사고로 어선에 있던 선원 전원이 실종됐음.
- 한국 해경은 경비정과 헬리콥터를 사고지점에 급파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7호 태풍 ‘곤파스’가 서해상에 상륙하면서 강한 풍랑으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한 중국대사관은 장신썬 대사를 팀장으로 긴급대응팀을 구성, 비상조치에 들어갔으며 한국 정부에 전력으로 인명구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음. 대사관 측은 한국 정부 및 중국 유관 부처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 조속히 사고선박 및 선원들의 신원을 파악중이라고 말했음.

● “李대통령, 中전인대 부위원장 접견”(8/30)

-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천즈리(陳至立)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했음.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양국은 경제적 왕래가 가장 많은 관계로, 특히 경제 분야는 전략적 동반자 사이로 빠르게 진전하고 있다”면서 “양국간 문화, 관광, 군사 등 다른 분야에서도 경제 분야에 비례해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이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중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고, 천 부위원장은 중국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중 수교 18주년을 맞아 양국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약적 관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양국 의회간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도록 전인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천 부위원장은 양국이 18년만에 급속한 관계 발전을 이룬 만큼 양국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과 국민간 우의 증진을 위해 중국 전인대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 한·일 관계

● “日 ‘독도영유권’ 주장 방위백서 10일 발표”(9/3)

- 일본이 10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2010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라는 기술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포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방위백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장을 집어넣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은 앞서 7월30일 방위백서를 발표하려다 8월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국강제병합 사죄 담화 발표와 강제병합 100주년인 8월 29일을 앞두고 한국과 외교 마찰을 우려해 발표를 미뤘음. 당시 공식적으로는 천안함 사건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최신 사안을 포함하기 위해 발간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7월 말 기자회견에서 독도영유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 국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며 방위백서 발표를 미뤄도 표현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예고했다. 일본은 1904년 2월에는 한일의정서, 같은 해 8월에는 한일협정서 체결을 강요해 대한제국의 손발을 묶은 뒤 1905년 1월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시마네(島根)현 오키도 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해왔고, 2005년부터는 방위백서에 이 같은 주장



을 포함했음.

라. 미·중 관계

● 美 백악관 고위관리 두명 오늘 訪中(9/5)

-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토머스 도널런 미국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위안화 환율 조정과 군사훈련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 5일 베이징에 도착, 나흘간의 방중 일정에 들어갈 예정임. 서머스 위원장과 도널런 부보좌관은 오는 8일까지 베이징에 머물면서 왕치산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다이빙귀 외무담당 국무위원을 비롯해 당·정·군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위안화 평가절상과 경협, 무역 등 경제문제와 군사 문제 등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한다고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이 밝혔음.
- 백악관 고위 관리의 이번 방중은 특히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실시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미중간에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이뤄져 양국 간에 한반도 정세와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목되고 있음. 중국은 한미군사훈련 이외에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개입 의지 표명과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 등에 큰 불만을 보이며 미국과 갈등해왔음. 미국은 앞서 지난 3월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과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중국에 파견, 양국 간 갈등 해소에 나섰으나 이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음.
- 중국의 미국문제 전문가들은 서머스 위원장과 도널런 부보좌관이 이번 방중에서 경제 문제와 군사 문제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음. 중국국제문제연구소 푸명즈 교수는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는 더블딕(이중침체)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인홍(時殷弘)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미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회복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중미 간 대화는 양국에 모두 유익할 것이며 6자회담 재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음. 한편, 중국은 지난달 26일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을 미국에 파견,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고위 관리들과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음.
- 이와 별도로 6자회담 참가국을 순방 중인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도 1일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했음.

● <미·중 관계개선 시동거나>(9/3)

- 최근 군사훈련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어온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이 고위 관리들을 잇따라 파견하고 있어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거는 것이



란 관측을 낳고 있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레브 리핑에서 토머스 도널런 미국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장 대변인은 “미·중 양국은 양국 관계 및 기타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방중하는 두 인사는 미국의 안보 및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주요 관리인데다 장 대변인이 양국 관계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양국 관계의 개선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역시 지난달 26일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을 미국에 파견,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고위 관리들과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했음.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추이 부부장은 카운터파트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과 외교분야 차관급 회의를 갖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갈등과 민감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음. 그는 또 곧 방중이 예정된 도널런 부보좌관과도 만났고 국방부의 미셸 플러노이 정책담당 차관 등 다른 미국의 고위 관리들과도 만나 현안을 논의했음.
-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5일부터 10일까지 엿새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카터 전 대통령은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의 초청으로 개인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지만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바 있어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 중국은 올해 초 달라이 라마 문제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4월 방미를 계기로 갈등이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남중국해 및 서해상에서의 군사훈련 등으로 대립각을 세워왔음.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은 최근 양국이 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파견해 활발한 접촉을 하는 것은 더이상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카터, 오는 5일 중국 방문(9/2)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의 초청으로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레브 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카터 전 대통령은 방중기간 베이징을 방문하는 데 이어 상하이 엑스포를 참관하고 후난(湖南)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에 참가한다고 말했다.
- 장 대변인은 그러나 카터 전 대통령이 이번 방중기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를 예방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



을 방문했으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때마침 중국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음. 한편 앤드루 영국 왕자는 중국 외교학회 초청으로 2일 영국 투자·무역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에 도착했음. 앤드루 왕자는 오는 11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고위인사 및 기업관계자들과 만나 중·영 양국간 무역과 투자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하이 엑스포내 영국관 등을 둘러볼 예정임.

● <美전문가들, 대북제재 ‘중역할론’ 지적>(9/1)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지난주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은 제재국면의 장기화 보다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의 ‘출구전략’차원에서 원하고 있는 6자회담으로의 복귀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외교노력과 제재를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보조를 맞추면서 뒷심을 보태줘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는 것.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군비통제협회’의 피터 크레이일 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올해 2차례에 걸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에서 나타난 양국의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이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제재가 북한의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음.
- 또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도 “미국과 중국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번 제재가 북한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음. 이런 맥락에서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의 1일 워싱턴 방문은 향후 대북제재의 ‘파괴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 우 특별대표는 예비회담을 거쳐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제의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 6자회담 특사 등을 만나 6자회담의 단계적 복귀 가능성을 타진할 공산이 크기 때문임. 하지만 일단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야만 회담복귀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돼 이견조율 여부가 주목됨.
- 미 국무부 군축·국제관계 차관실의 조피 조지프 선임 고문은 31일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이 해야 할 일들을 북한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10.4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믿음만한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조지



타운대 교수는 같은 세미나에서 6자회담의 재개 여부와 관련해 “우리가 과거 여러 차례 지켜봐 왔듯이 회담이 쉽사리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음.

● <中, 美의 추가대북 제재에 촉각>(8/31)

- 중국이 미국이 발표한 추가 대북 제재안의 파장과 영향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중국은 이번 추가 제재안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방중이 끝난 직후 발표된 것에 특히 주목하고 있음. 아직까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 관영 언론의 보도를 통해 중국 정부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관영 신화통신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발 보도를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존의 대북제재에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며 대북 제재안 발효 소식을 비중있게 전했다. 통신은 제재대상에 총 8개의 기관 및 단체와 4명의 개인이 포함됐다면서 특히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이 새로운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음. 노동당 39호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며 정찰총국은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곳임.
- 반관영 중국신문사도 워싱턴발 보도에서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안 발효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달 방한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발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이미 예고했긴 했지만 북·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의 우호를 과시하며 6자회담 재개 희망 입장을 이끌어낸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재안이 발표된 것이어서 중국으로선 내심 당혹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제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수단인 자금줄을 정조준한 것이어서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 재개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는 중국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마. 미·일 관계

● <오자와 美해병대 ‘불필요론’ 논란>(9/4)

- 일본 총리 자리인 민주당 대표를 놓고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겨루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민주당 간사장의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관련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음. 4일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자와 전 간사장은 3일 한 민방에 출연해 “더 이상의 미 해병 실전부대(전투부대)는 필요 없다. 미국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2천명 밖에 없다”고 밝혔음. 그는 또 “동



맹관계는 대등한 것이다. 외무성 주도의 외교로는 안 된다”고 외무성에 불만을 표시했음.

- 이에 대해 간 총리 지지를 선언한 오카다 외상은 “미 해병대는 억지력으로서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했고,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도 “기존 미·일 합의를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음.
-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자와 전 간사장은 미 제7함대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미 해병대의 오키나와 주둔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규모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렸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2천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오카다 외상은 1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발언해야 오해가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음. 하지만,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규모에 대해 기타자와 방위상은 지난 2월 강연에서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1만 명도 되지 않는다”면서 “현 시점에서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으나 약 4천~5천 명이다”고 밝힌 바 있음.
-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모두 1만 4천 명이며 이 가운데 1천 명이 아프가니스탄에 상시 파견돼 있기 때문에 실제 주둔 규모는 1만 3천 명이라고 전했다.

● 美, 日 ‘이란 추가제재’ 적극 환영(9/3)

- 미국은 3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팀 가이트너 재무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대(對) 이란 추가제재 결정을 크게 환영했음. 클린턴 장관과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를 이행하는 일본의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확산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음.
- 두 장관은 “일본은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등 다른 책임있는 국가들과 (이란 제재에) 동참했다”고 평가했음. 두 장관은 이어 “우리는 특히 멜라트은행과 같은 많은 이란의 은행을 포함한 여러 이란 기관에 대한 일본의 제재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음. 멜라트은행은 한국 정부도 제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은행임.
- 클린턴과 가이트너 장관은 또 “이란의 주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의 적극 이행 결정이 비용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다”고 언급, 일본이 이란의 경제적 회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추가제재를 단행한데 대해 사의를 표했음. 두 장관은 이어 “우리는 다른 국가도 일본의 예를 따르고,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음.
- 앞서 일본은 이날 열린 내각 회의를 통해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제한을 강화하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88개



기관 및 24명의 개인에 대해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입국금지 대상도 확대했음.

● <日정권교체 1년> ③美와 뼈격..韓中과 밀월(끝)(9/2)

- 일본 민주당 정권을 바라보는 미국의 눈길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음.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로 양국 간의 갈등이 심각해졌을 때에는 일본 내에서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과의 동맹을 중시한다”는 말이 나돌았을 정도였음.
- 한편 민주당 정권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내걸고 한국, 중국과의 접근을 모색했음. 이는 급속히 대두하는 동아시아를 중시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미일동맹과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가 일본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음.
- 나고시 전체 면적(19.69km²)의 4분의 1에 이르는 후텐마 비행장 주변에는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주일미군과 주민 사이에 마찰이 끊이지 않았음. 미일 양국은 오랫동안 기지 이전 문제를 논의한 끝에 1996년 4월12일 후텐마 비행장을 일본에 반환하기로 약속했고, 2006년에는 미 해병대 병력 8천명과 가족 9천명을 괌으로 이전.배치하는 대신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현 나고시 헤노코 연안으로 2014년까지 옮긴다는데 합의했음.
- 하지만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이를 지키지 않고,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 미국과 마찰을 빚었음. 이 과정에서 가고시마(鹿兒島)현 도쿠노시마(徳之島) 등이 대체 이전지로 부상했지만 미국측은 오키나와에 미군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가운데 해병대만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다며 난색을 보였음.
- 미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하토야마 총리는 천안함 폭발 사건을 계기로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강하게 부각된 가운데 현실론에 밀려 헤노코 이전안으로 돌아갔고, 5월28일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에 반대한 사민당 당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소비자담당상을 파면해 연립 내각의 한 축을 무너뜨린 하토야마 총리는 자신도 6월초 중도 사퇴로 내몰렸음. 바통을 이어받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미일동맹을 중시한다는 입장에 따라 ‘오키나와 내 기지 이전’ 약속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굳히자 이번에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민주당 정권은 여전히 ‘후텐마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미국은 민주당 정권의 미일동맹 수호 의지를 의심하기에 이르렀음. 더구나 상대적으로 친미 성향인 간 내각이 3개월 만에 흔들리고, 친중 성향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간사장이 차기 총리 후보로 떠오르자 후텐마 이전 문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등 미일 양국 관계는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



- 지난달 15일에는 각료 전원이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참배하러 가지 않음으로써 자민당 정권과의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냈음. 야스쿠니신사는 A급 전범 뿐만 아니라 강화도 사건, 의병 진압, 태평양전쟁 등 각종 침략전쟁에 관련된 이들을 찬양하는 시설임. 역대 자민당 정권은 내각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이곳에 가서 참배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상처를 해집었지만, 민주당 정권은 집권 이후 이를 중단해 인접국의 호감을 샀음.
- 8월10일에는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사죄 담화를 발표했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가져간 한국의 문화재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음.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와중에 한국측에선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가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은 아님. 탄탄대로는 커녕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이 동중국해로 군사적 진출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 안에선 중국에 대한 견제 의식이 날로 강화되고 있음.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중일 양국의 영토 분쟁에 미국이 개입할 경우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연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됨. 경제적으로도 일본은 중국·한국과 갈등 요인을 안고 있음.
- 일본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따돌리고 세계 2위에 올라설 것이 확실시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려고 모색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만, 한국은 대일무역적자가 한층 커질까 우려하고 있음.
-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독도나 역사교과서 문제 등 역사와 관련된 사안이 잠재해 있음. 일본 입장에서는 대북 관계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임. 일본은 북한과 국교정상화 협상을 중단한 채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만을 요구하고 있지만, 핵무기·미사일 등을 둘러싼 6자회담에서 주도권을 놓치고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함.

바. 미·러 관계

○ 美, “죽음의 상인’ 빨리 넘겨달라”(9/1)

- 미국 정부는 ‘죽음의 상인’으로 불리는 러시아 무기밀매상 빅토르 부트(44)를 상대로 태국 사법당국이 진행 중인 추가 소송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태국 관영 TNA 통신이 1일 보도했음. 태국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부트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으나 법무부는 부트가 돈세탁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이들 혐의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부트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법무부 해외업무 담당 국장인 시리삭 티아파는 “미국 정부는 부트를 상대로 제기된 추가 소송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태국 외무부를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시리삭 국장은 “현재 검찰이 부트의 돈 세탁과 사기 혐의 등에 대한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1~2일 안에 소송 철회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 옛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KGB) 출신인 부트는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 등의 독재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인 살해기도와 테러리스트 지원물자 제공 시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 인도를 요청해왔음. 부트는 2008년 3월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으로 가장한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함정수사에 걸려 무기거래 계약을 위해 방콕을 방문했다가 체포됐음. 미국은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나흘만인 지난달 24일 특별기를 방콕 돈므앙 공항에 파견, 부트의 신병을 넘겨받으려 했으나 태국 정부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며 부트의 신병을 아직 미국에 넘기지 않고 있음.

사. 중·일 관계

● “중학계 ‘오키나와는 중국땅’ 논문 급증”(8/18)

- 중국에서 최근 몇 년새 학계를 중심으로 오키나와(沖繩)가 중국 땅이라며 반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과거 오키나와가 류큐(琉球)왕국이었던 시절 중국과의 교역으로 번성했고, 중국에 종속된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중국 영토라는 주장이 늘고 있음.
- 작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역사학자 심포지엄에서는 메이지(明治) 정부에 의한 1879년의 류큐 병합, 2차 세계대전 후인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 등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분출했음. 이 세미나를 주최한 학자 가운데 한 명인 쉬용(徐勇) 베이징대 교수는 중일관계 전문가로 중일 역사공동연구의 중국측 위원을 지낸 유력한 연구자임. 류큐대학의 가미사토 겐이치(上里賢一) 명예교수는 “쉬용 교수는 과격한 반일 학자가 아님에도 이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도, 중국 공산당도 공식견해와 다른 이런 주장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오키나와를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많았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가 지난 2006년 이후 다시 20여편의 논문이 쏟아졌음. 중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오키나와의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을 놓고 미국과 일본이 알력을 빚으면서 동맹관계에 금이 가고 있고, 일본 정부에 대한 오키나와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틈을 노린 것이라



고 마이니치신문은 해석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중국의 마오쩌퉁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간행한 논문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에서 오키나와에 대해 “제국주의 국가가 강탈한 중국의 많은 속국과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했음.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간행된 논문에서는 이 부분에 손질이 가해졌고 오키나와라는 지명도 언급되지 않았음.

아. 일·러 관계

● 러, 태평양전쟁 승전 행사 처음으로 치러(9/2)

- 러시아가 처음으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날인 9월 2일을 2차대전 종전기념일로 기념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음. 앞서 7월 러시아 의회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건의에 따라 일본군이 미국과 옛 소련을 포함한 연합군에 공식 항복한 날인 1945년 9월 2일을 2차대전 종전기념일로 제정했었음.
- 지금까지 국경일로 기념해 오던 대(對) 독일전 승전 기념일(5월 9일)과 함께 또 하나의 2차대전 승전 기념일을 정한 것임. 이날 승전 행사는 주로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치러졌음. 캄차카 반도의 페트로 파블롭스크-감차트스키에서는 쿠릴 열도에 진주해 있던 일본군을 격퇴시킨 소련 공수부대의 승리를 기리는 집회가 열렸음.
- 사할린 섬에서는 소련군의 대일전 승리를 재현한 모의 전투가 벌어 지기도 했음.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승전을 기리는 집회와 군사 퍼레이드가 벌어졌음. 블라디보스토크 참전 전우회 회장 야코프 칸은 “소련군은 개전한 지 불과 23일 만에 막강한 군비를 갖춘 일본군을 물리치고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했던 전쟁을 마무리지었다”고 회고했음.
- 소련은 독일이 항복(5월 9일)한 지 3개월 뒤인 8월 9일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3개군 150만 명을 동원해 만주에 주둔 중이던 일본 관동군을 공격했음. 미국이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날이었음. 뒤이어 소련군은 한반도 북부의 극동 지역으로 진군을 계속하며 일본을 압박했음. 미군과 소련군의 강력한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8월 15일 전격적으로 항복을 선언했고 일본군은 9월 2일 도쿄만 요코하마에 정박 중이던 미군 전함 미주리호 선상에서 항복 문서에 정식 서명했음.
- 하지만 대일전 승전 행사는 러시아가 매년 성대하게 기념해온 대독전 승전 행사에 비해 소규모로 치러졌음. 기념행사는 주로 극동 지역에서 열렸으며 모스크바에서는 큰 행사가 없었음. 크렘린궁 앞 붉은 광장에서 군대와 최신 무기들을 동원한 가운데 치러지는 대독전 기념행사와는 대조적이었음.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나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극동에서 열린 축하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음. 대일전 승전일이 기념일이 되긴 했지만 대독전 승전일과는 달리 공휴일로 지정되지도 않았음.



자. 기 타

● 日, 이란 추가 제재 결정(9/3)

- 일본은 3일 오전 열린 내각회의에서 대(對) 이란 추가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이에 따라 일본은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제한을 강화하고, 핵무기 개발에 관여했다고 추정되는 88개 단체와 개인 24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입국금지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음. 하지만 이란 원유 수입을 규제하지는 않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일본은 유럽연합(EU)이 7월에 결정한 제재안을 참고해 이번 추가 제재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달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40개 단체와 개인 1명에 대한 자산 동결 등 대이란 금융제재 조치를 결정했고, 이후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이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中 서해서 군사훈련 시작(9/1)

-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1일 서해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나흘간의 해상 훈련에 돌입했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인민해방군의 베이하이(北海)함대가 칭다오(靑島)시 남동쪽 해상에서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실탄훈련'을 한다고 보도했음. 통신은 특히 이번 훈련에서 지난해 10월 1일 건국 60주년 기념 국경절을 맞아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군용기와 함정, 무기 등이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 시나닷컴 등 중국 포털사이트는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사가 운영하는 '중국군망' 등에 올라 있는 사진을 게재,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함정과 전투기, 무기 등을 간접적으로 소개했음. 사진소개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서는 022호 스텔스 미사일이 장착된 최신예 고속정과 해상공격 전문의 페이샤오 전투기 편대,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051C형 구축함, 신형 초계기, 이동식 레이더, PL-12형 대공 미사일 등 첨단 무기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최신예 고속정은 220t급으로 길이 43m, 폭 12m에 스텔스 성능에다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8기나 되는 대함미사일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훈련은 중국 정부가 이달 5~9일 서해에서 펼쳐질 예정인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실시돼 주목받고 있음. 중국 측은 한·미 연합훈련에 거둬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이에 나름대로 대응하겠다는 뜻까지 밝힌 바 있음.
- 통신은 그러나 국방부 신문사무국을 인용, "이 훈련은 연도별 훈련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실제 병력을 동원한 훈련"이라면서 "훈련은 함포 사격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한미 훈련 실시 시점보다 나흘 앞서 서해상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중국의



발표와는 달리 한미 훈련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음. 특히 이번 훈련에 앞서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훈련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임. 중국은 그동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인근 해역에서 잇따라 군사훈련을 했지만 훈련이 끝난 이후 관영 언론을 통해 훈련 사실을 공개했을 뿐 통상적으로 미리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아 왔음.

● 李대통령, 9~11일 러시아 방문(9/1)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9~11일 러시아를 방문, 야로슬라블 세계정책 포럼에 참석하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1일 발표했다.
- 이 대통령은 10일 제2차 야로슬라블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경험을 소개하고 러시아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 현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 경제성장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한 민주주의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한·러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확대·심화를 통해 상호번영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야로슬라블 포럼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난해 창설한 정책포럼으로, 러시아는 이 포럼을 '정치적 다보스 포럼'으로 발전시켜 1997년부터 연례 개최중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과 함께 국제정치, 경제분야에서 국가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이번 2차 포럼에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 압둘 칼람 전 인도 대통령, 타보 음베키 전 남아공 대통령 등 5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 대통령은 이날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추진, 에너지·자원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 등 양국 공통 관심사에 대한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2008년 7월 일본 도야코(洞爺湖) G8(주요 8개국) 확대정상회의, 그해 9월 러시아 방문, 지난해 7월 이탈리아 라퀼라 G8 확대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임.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말 모랄레스 대통령의 방한 당시 정상회담 등을 통해 극진한 환대와 예우를 함으로써 모랄레스 대통령이 일본 등 리튬 개발 참여 경쟁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록 했다는 후문임.



[참고 2] <새 대북제재 대상 특징과 면면>(연합뉴스, 8/31)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30일 발표한 새로운 대북제재 대상에는 북한 지도부의 자금관리처인 ‘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등 당·군의 핵심기구가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추가 제재대상은 북한의 ‘통치자금’ 조달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와 해외 공작활동의 진원지를 정면으로 겨냥으로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숨통을 죄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이번 제재대상 명단에서 주목을 끄는 주요 대상 기관 및 개인의 특징과 면면이다.

▲39호실 =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국가범죄의 본산이자 북한 ‘통치자금’ 관리처로 지목되는 기구다.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 폴 렉스턴 칸 미국 육군전쟁대학 부교수 등은 지난 3월 공동 저술한 ‘범죄주권(Criminal Sovereignty), 북한의 불법적인 국제활동에 대한 이해’라는 보고서에서 39호실의 정체를 이처럼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은 구소련의 원조 이외에도 정권을 지탱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냉전종식 훨씬 이전인 지난 1974년 조선노동당 중앙위 산하 비서국 소속으로 ‘39호실’을 설치했다. 39호실은 슈퍼노트(100달러 위폐) 제작, 담배 위조, 아편 재배,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의 산실역할을 해왔며, 사치품 수입의 창구역할도 해왔다.

국무부는 39호실이 평안남도 상원에서 히로뽕을 생산했으며, 한국과 중국내의 마약배급을 위해 소규모의 북한 밀수단에 히로뽕을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무부는 39호실이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에 아편농장을 운영하면서 함흥과 나진에서 아편과 헤로인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39호실은 또 작년에는 1천500만달러에 달하는 이탈리아제 초호화 요트 2대를 구입, 북한으로 보내려다 적발된 적이 있으며, 앞서 지난 2005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됐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기도한 적도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북한의 주요 금융기관인 대성은행과 고려은행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강원도 문천금강제련소, 원평대흥수산사업소, 대성타이어공장 등 ‘노른자위’ 공장 및 기업소 1백여 곳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9호실장이던 김동운이 EU(유럽연합)의 제재대상 리스트에 오르자 올해 초 제2인자였던 전일춘으로 교체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찰총국 = 2009년 2월 노동당 소속의 작전부와 35호실,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이 통폐합돼 탄생한 기구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는 ‘청송연합’을 통제하고 있다. 또 천안함 사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기도 사건 등의 배후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에서 2년전 발표됐던 행정명령 13466호의 범위



를 확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이유로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기습공격을 거론한 것과 이번 정찰총국의 제재대상 지정은 무관치 않다.

▲청송연합(Green Pine Associated Corporation) = 지난 2007년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던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로 천안함 공격 어뢰인 CHT-02D를 수출한 무기수출업체로 알려져 있다. 정찰총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조직으로,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는 재래식 무기 총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다. 잠수함, 군사용 보트, 미사일 시스템 등 해군전력과 관련된 군수물자 생산에 전문화돼 있으며, 이란 방산업체에 어뢰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수공업부, 제2경제위원회 = 군수공업부는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업무를 감독하는 부서다. 제2경제위원회는 미국의 대북 제재대상에 이미 올라있는 단천산업은행을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노동당 기구이며, 탄도미사일 생산을 감독한다. KOMID의 활동에 대한 지시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자연과학원 =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북한의 미사일 연구개발의 핵심 기구로 알려져 있다. 평양 룡성지구에 위치한 제2자연과학원은 중·장거리 로켓의 조속한 연구·개발, 군사분계선과 해안선을 완전 봉쇄할 수 있는 고성능 지뢰 개발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대성무역, 흥진무역 = 대성무역은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을 대리해 시리아와 거래를 하고 있고, 흥진무역은 KOMID의 일선 조달업무를 맡고 있다. 흥진무역은 특히 이란의 ‘샤히드 헤마트 인터스트리얼 그룹’에 미사일 관련 물자를 제공하는데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영철 정찰총국장 = 2006~2007년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을 맡았을 때 “북방한계선(NLL)은 강도가 그은 선”이라고 폭언을 했고, 2008년에는 ‘12.1’ 조치를 통해 남측의 육로출입 제한을 주도한 북한 군부의 대표적 ‘강경파’. 북한 간첩을 이용한 황장엽 씨 살해기도 계획 역시 그의 작품이었던 것으로 한국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난 바 있다.

▲윤호진 남천강무역 대표 = 북한의 제2차 핵위기가 불거졌던 지난 2002년을 전후해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우라늄농축에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관 등의 조달책임자로 지목돼 온 인물이다. 미국의 핵군축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올해 초 자신의 저서에서 북한 핵개발 및 핵확산 시도의 핵심 인물로 윤호진을 꼽았다. 이미 지난해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가 발표



한 제재대상 개인 5명에 포함돼 있는 상태다.

▲리제선, 리홍섭 =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영변핵연구소 활동을 책임지는 원자력총국에 몸담고 있는 인물들이다. 원자력총국은 이미 지난 2009년 9월 유엔에 의해 제재대상에 올라있다.

(ksi@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8/31/0511000000AKR201008310089001>.
HTML



[참고 3] 북중 지도부 상호방문 일지(연합뉴스, 8/30)

(베이징=연합뉴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6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뒤 30일 귀국했다. 1980년대 이후 북한과 중국 지도부의 상호방문 일지를 최근 일자부터 정리했다.

- ▲ 2010. 6.2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6번째 방중
- ▲ 2010. 5. 3 = 김정일 위원장 5번째 방중
- ▲ 2010. 4.29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 ▲ 2009.10.27 = 최태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방중
- ▲ 2009.10. 4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방북
- ▲ 2009. 3.17 = 김영일 북한 내각 총리 방중
- ▲ 2008. 8. 7 = 김영남 상임위원장 방중
- ▲ 2008. 6.17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 방북
- ▲ 2006. 1.10 = 김정일 위원장 4번째 방중
- ▲ 2005.10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방북
- ▲ 2005. 3 = 박봉주 내각 총리 방중
- ▲ 2004.10 = 김영남 상임위원장 방중
- ▲ 2004. 4 = 김정일 위원장 3번째 방중
- ▲ 2003.10 = 우방귀(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방북
- ▲ 2001. 9 =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방북
- ▲ 2001. 1 = 김정일 위원장 2번째 방중
- ▲ 2000. 5 = 김정일 위원장 1번째 방중
- ▲ 1999. 6 = 김영남 위원장 방중
- ▲ 1992. 4 = 양상쿤(楊尙昆) 중국 국가주석 방북
- ▲ 1991.10 = 김일성 주석 방중
- ▲ 1991. 5 = 리펑(李鵬) 총리 방북
- ▲ 1990. 3 = 장쩌민 공산당 총서기 방북
- ▲ 1989.11 = 김일성 주석 방중
- ▲ 1989. 4 = 자오쯔양(趙紫陽) 공산당 총서기 방북
- ▲ 1988. 9 = 양상쿤 국가주석 방북
- ▲ 1987. 5 = 김일성 주석 방중
- ▲ 1985.10 = 리셴넨(李先念) 중국 국가주석 방북
- ▲ 1985. 5 = 후야오방(胡耀邦) 공산당 총서기 방북
- ▲ 1984.11 = 김일성 주석 방중
- ▲ 1984. 5 = 후야오방 총서기 방북



- ▲ 1983. 6 = 김정일 노동당 중앙위 비서 방중
- ▲ 1982. 9 = 김일성 주석 방중
- ▲ 1982. 4 = 덩샤오핑(鄧小平) 당중앙군사위 주석.후야오방 총서기 방북
- ▲ 1980.12 = 자오쯔양(趙紫陽) 총리 방북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8/27/0511000000AKR20100827190200009.HTML>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